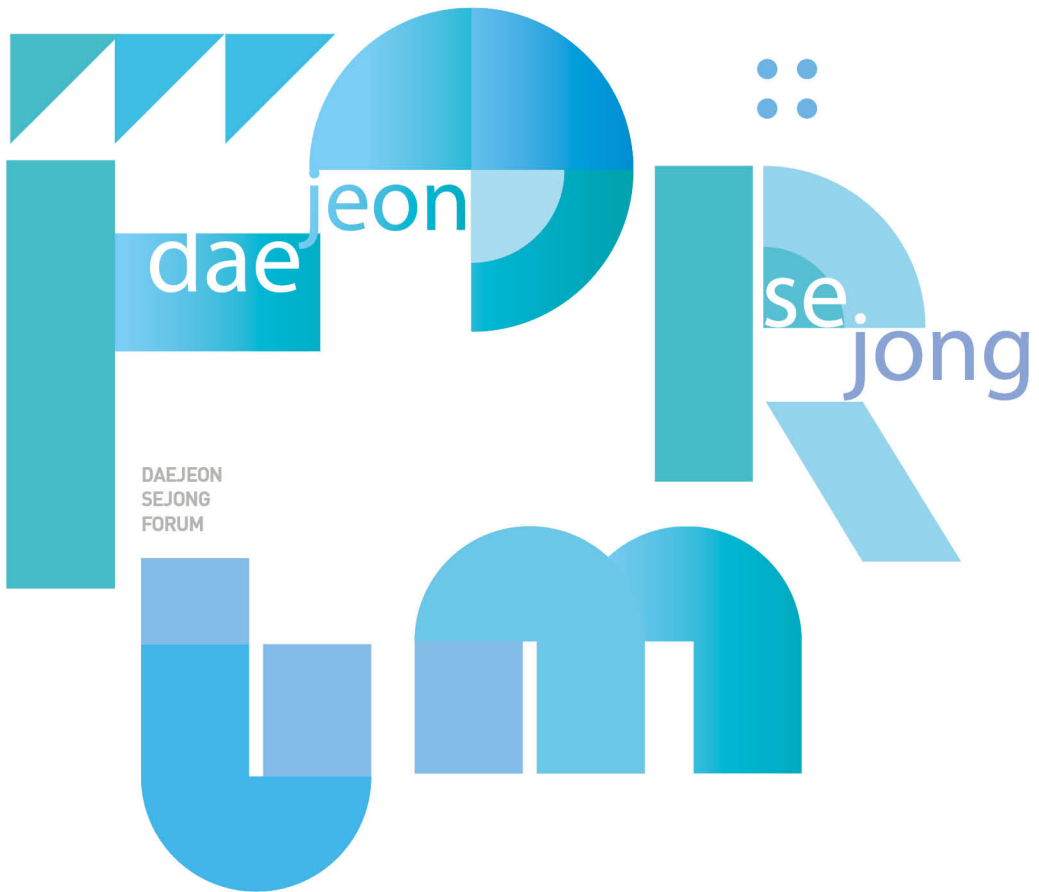


대전세종포럼

기획특집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변화

- 코로나19와 보건의료
- 코로나19로 인한 복지분야의 대응과 과제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분야 전망과 대책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와 향후 전망
- 가족감염병으로 인한 중장기적 환경재난 대응방향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적 이슈



DAEJEON
SEJONG
FORUM

시민이 행복한
미래 대전·세종만들기

MISSION



VISION

시민행복과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창의적 연구기관

목표 및 추진전략

01

미래지향적
도시정책연구 선도

- 활용도 높은 맞춤형 정책 개발
- 대전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 지원
- 시민 참여형 정책네트워크 강화

02

정책기여도가 높은
연구성과 생산

- 도시의 미래비전과 발전방향 연구
- 연구지원체계의 선진화
- 연구 인력의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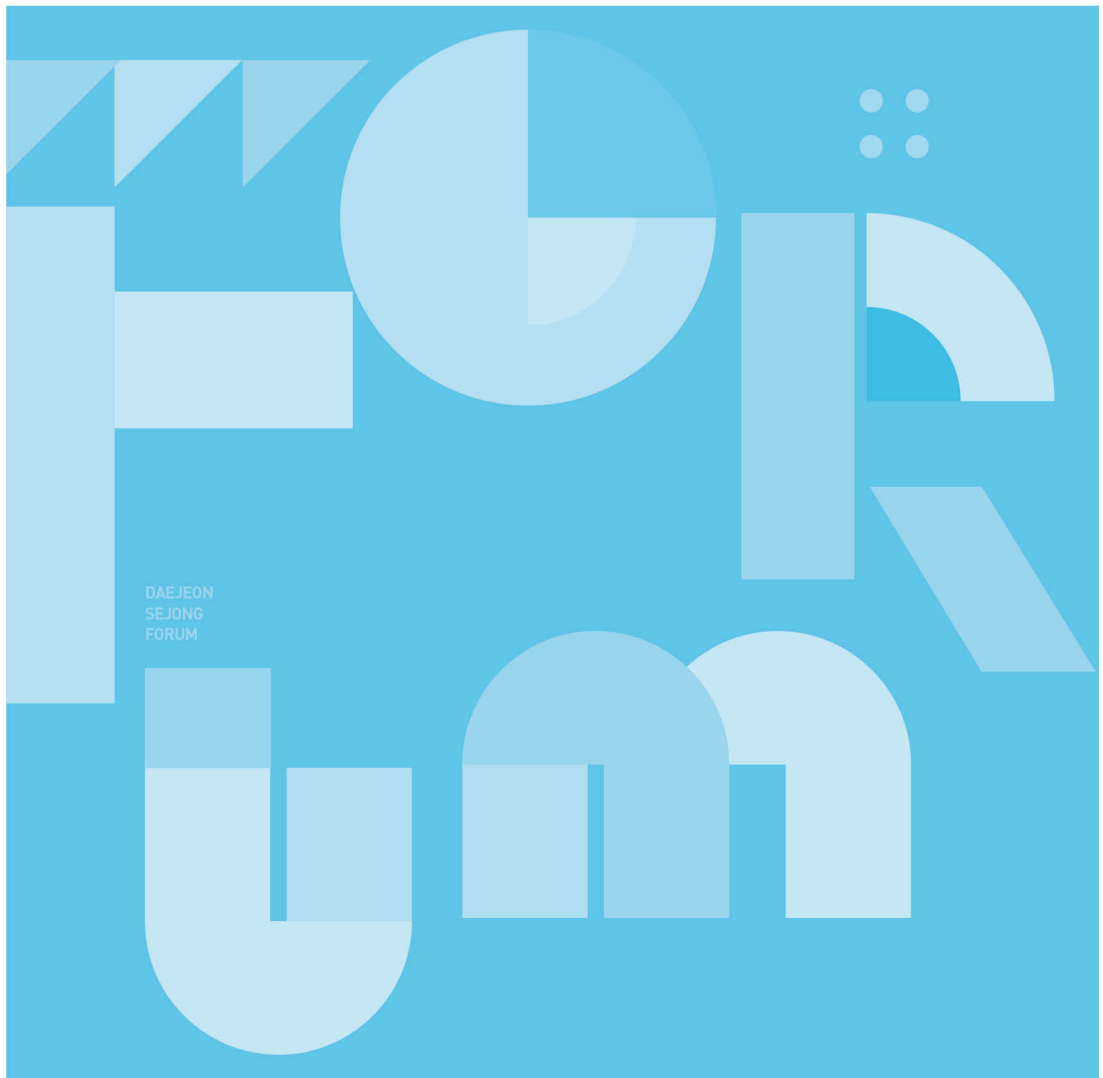
03

열정과 창의가 넘치는
공동체 구축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회계시스템 확립
- 소통, 신뢰 및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조성
- 경영관리시스템 혁신

대전세종포럼

2020 여름 · 통권 제73호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변화

2020 여름 통권 제73호

Contents

06

코로나19와 보건의료

권명진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2

코로나19로 인한 복지분야의 대응과 과제

이경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36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분야 전망과 대책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0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와 향후 전망

이혜미 경희대학교 교수

64

가축감염병으로 인한 중장기적 환경재난 대응방향

김건하 한남대학교 교수

78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적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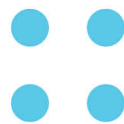
한상현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코로나19와 보건의료

● 권명진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코로나19와 보건의료

권명진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범유행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SARS-CoV-2의 감염증인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비말과 접촉 등으로 전파되는 이 질병의 특성 상 사람들 간의 직접 전파 우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1월에 첫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월과 3월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3월 2일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격적인 진단검사와 적극적인 확진자 관리 등의 전파 예방을 위한 노력과 국민들의 모범적인 대응으로 5월 7일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4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2월과 3월 우리나라를 안타깝게 생각했던 나라들에게 오히려 검진과 방역 물품들을 보급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모범 대응국이 되었다.

2020년 5월 8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3,779,329명이고 267,935명이 사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총 확진자 수는 10,822명이고 256명이 사망하였다.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대전시의 경우 총 확진자 수는 41명이고, 사망자는 1명이다. 대전시와 충남대병원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적절한 지역사회와 확진자 관리로 효율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전파를 예방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직후 문자메세지 등으로 확진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 예방을 위한 방역 등과 같은 대전시의 노력은 시민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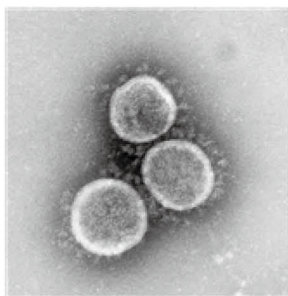
7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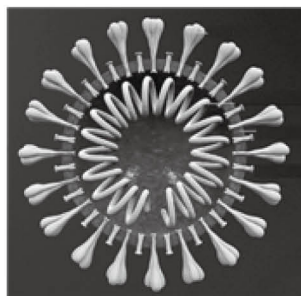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란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법정감염병이다.

병원체인 SARS-CoV-2는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는 세균과는 달리 다른 유기체의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생명활동을 하는 전염성 감염원이자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 존재(반생물)이다. 증식을 위해서는 숙주가 필요하다. 바이러스는 세균을 포함한 동물과 식물에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생물체를 감염시킬 수 있다. 비리온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입자는 DNA 또는 RNA로 만들어진 유전 물질을 보호하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적인 비리온은 세균 크기의 약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이다. SARS-CoV-2는 태양의 코로나를 연상시키는 둥글납작한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스파이크, RNA, 외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그림 1. 코로나 바이러스



자료: NIAID



자료: wikimedia



자료: NIAID

바이러스의 전파방법은 비말, 접촉, 혈액 등 다양하다. SARS-CoV-2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해서 또는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져서 전파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잠복기는 1~14일이며, 호흡기 분비물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거나 특이 유전자가 검출될 때 진단하게 된다.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상이 나타나며,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경미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불편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지만, 고령자나 고혈압,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아직 예방 또는 치료 목적으로 승인된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는 없어 수액보충, 해열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한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현황

2020년 5월 8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는 3,779,329명이고 267,935명이 사망(6.98%)하였으며, 1,255,685명이 완치되었다<표 1>. 우리나라의 경우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822명이고, 이 중 256명(2.37%)이 사망하였으며 9,484명이 완치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대구시의 경우 6,856명의 확진자와 17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지만, 대전시의 경우 총 41명의 확진자 중 21명이 완치되었고 사망자는 1명이다.

이렇게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감염회로와 격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지역사회와 확진자 관리가 필요하다.

표 1. 나라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현황(5.8일 기준)

단위: 명

순위	나라	총 확진자 수	백만 명당 확진자수	총 완치자 수	총 사망자 수
1	미국	1,254,740	3,911	173,939	75,543
2	스페인	221,447	4,702	128,511	26,070
3	이탈리아	215,858	3,583	96,276	29,958
4	영국	206,715	3,112	-	30,615
5	러시아	177,160	1,207	23,903	1,625
11	중국	82,886	59	77,957	4,633
14	인도	52,952	39	15,267	1,783
26	싱가포르	20,939	3,671	1,712	20
32	일본	15,547	123	4,918	557
38	우리나라	10,822	209	9,484	256

자료: 질병관리본부, google.co.kr

3. 감염회로

SARS-CoV-2의 감염과 전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염회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감염이 일어나려면 감염원, 저장소, 탈출구, 전파방법, 침입구, 감수성이 있는 숙주의 6개 요소가 필요하며 이 요소들의 연결을 감염회로라 한다. 이 감염회로를 차단하면 감염을 조절하고 전파를 예방할 수 있다<그림 2>.

감염원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이 있으며 이들은 유기체에 서식하면서 감염성 질환을 일으킨다. 감염은 병원성 미생물의 수가 많을수록, 독성이 강할수록, 숙주 체내에 침투하는 능력이 강할수록, 숙주와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미생물에 대한 숙주의 감수성이 높을수록, 숙주의 체내에 대한 적응력이 높을수록 잘 일어난다.

저장소는 병원성 미생물의 성장과 증식을 위한 자연서식지로 사람, 동물, 음식, 대소변 등이 있다. 이 중 사람이 저장소인 경우, 증상이 있는 환자와 증상은 없지만 몸속에 있는 병원균을 옮길 수 있는 보균자로 나눌 수 있다. 탈출구는 병원성 미생물이 저장소에서 빠져 나가는 경로로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노생식기계, 혈액, 피부 등이 있다.

전파방법은 병원성 미생물이 저장소에서 나간 후 다른 사람이나 숙주에 도달하기 위한 전파수단으로 직접전파, 간접전파, 공기전파 등이 있다. 이 중 직접전파에 해당하는 비말 전파는 감염원과 숙주의 거리가 약 1m 이내일 때 이루어지며 기침, 재채기, 말하기 등에서 나온 입자가 5 μ m(1×10^{-6} m)보다 큰 비말이 다른 사람의 눈, 코, 입의 점막을 통해 직접 전파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인 SARS-CoV-2는 주로 비말로 전파되므로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입구는 보통 미생물이 저장소에서 탈출했던 경로와 같다. SARS-CoV-2는 주로 호흡기계로 탈출하여 호흡기계로 침입하게 된다.

감수성있는 숙주는 감염위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면역기능이 떨어진 숙주, 자연방어기전이 손상된 숙주가 이에 해당한다. SARS-CoV-2의 전파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회로의 차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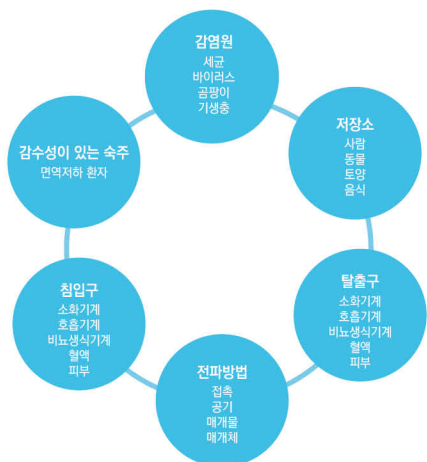


그림 2. 감염회로

자료: 기본간호학(수문사)

4. 격리

위 감염회로에서 살펴본 것처럼 SARS-CoV-2는 호흡기계를 통한 비말감염이나 오염된 손 등으로 인한 접촉으로 전파되므로 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위생과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환자와 보균자의 격리가 필요하다.

격리(isolation)란 환자와 다른 사람 간의 감염성 질환의 전파를 제한하기 위한 보호조치이다. 격리방법은 각종 새로운 질병의 출현에 따라 시대와 함께 발전해왔으며 최근에는 2007년 미국 병원 감염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주의와 전파경로에 따른 격리주의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비말이나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SARS-CoV-2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를 준수해야 한다. 표준주의는 모든 미생물의 전파를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한다. 비말주의는 호흡기 비말(5 μ m를 초과하는 큰 비말)이 콧물, 기침, 대화를 통해 전파할 우려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와 반경 1m 이내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접촉주의는 접촉으로 전파될 우려가 높은 감염원에 적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환자와 접촉 시 14일 간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해야 한다.

자가격리 시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며, 만일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 내에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한다. 대전시에서는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격리해제는 증상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증상이 있는 확진환자의 격리해제는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임상기준은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검사기준은 유전자 증폭검사(R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증상이 없는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7일째 검사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되며,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 검사(확진일로부터 14일째), 이 결과도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진행하며 24시간 간격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2회 음성이 나오면 격리해제 된다.

2020년 5월 8일 현재 대전시의 격리중인 자는 2명이며, 접촉자 990명 중 격리중인 자는 38명이다<표 2>.

표 2. 지역별 격리 현황(5.8일 기준)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격리중	115	14	404	22	2	2	6	1	130	10	6	13	5	4	107	12	1
격리 해제	520	123	6,277	75	28	38	37	45	538	41	41	130	14	12	1,206	105	12
합계	635	137	6,681	97	30	40	43	46	668	51	47	143	19	16	1,313	117	13

자료: 질병관리본부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진단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질병관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진단으로 확진자를 분류한 후에야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등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관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하루 1만~2만 건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검체 채취 시 전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드라이브 스루방법을 최초로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어 전파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년 5월 8일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위한 검사 수는 654,863건이며 이 중 1.6%인 10,822건이 양성으로 확진되었다. 대전시의 경우 2020년 5월 8일 현재 총 14,90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124건이 검사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검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광범위하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많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선 2015년 메르스를 경험한 우리나라 정부가 2017년 도입한 ‘긴급사용승인제도’ 덕분이다. 아직 허가받지 못한 진단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을 허가해 주는 이 제도로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의심환자와 유증상자는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한몫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RT-PCR 검사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검사는 실시간 증폭되는 바이러스의 DNA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검체 내의 target DNA 유무뿐 아니라 DNA의 양까지 정량분석이 가능한 방법으로 정확도는 95% 수준이다. 이에 반해 항원-항체 검사법은 진단결과는 빠르게 얻을 수 있지만 50-70%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를 보여 사용하지 않는다. RT-PCR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검체 적절성, 환자상태, 검사의 적절성 등이다. 필수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는 하기도 검체 1개와 상기도 검체 1개를 각각 채취한다. 검체 채취 시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표준주의를 적용한다. 검사 결과를 알기까지 6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전시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는 동구 2곳, 중구 4곳, 서구 3곳, 유성구 2곳과 대덕구 3곳의 총 14곳이며, 선별진료소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해 방문해야 한다.

RT-PCR 검사 방식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우리나라 진단키트는 2020년 4월 18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EUA)을 받았으며 진단키트, 장비, 시약 등을 6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의료기관 병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는 시도별로 구성된 환자관리반 의료진에 의해 중증도에 따라 경중·중등도·중증·최중증으로 분류되고 중증환자는 감염병전담병원, 국가 지정 입원치료기관 등에서 입원치료를 우선 제공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에 대해서는 자택이나 시설에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증상 모니터링 등이 시행된다<그림 3>.

그림 3. 병상배정 업무절차



대전시의 감염병전담병원은 충남대병원, 국군대전병원, 시립제2노인전문병원, 대전보훈병원의 4곳이며, 국가지정 입원치료기관은 충남대병원이다. 이들 병원은 훈련에 따라 확진환자를 치료해 안전한 병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호흡기 질환 환자 전용 진료구역을 따로 마련해 감염 걱정 없이 병원을 내원할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은 대전의 대전한국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유성선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의 6곳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환경관리가 필수적이다.

집중관리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및 접촉자가 발생한 경우 확산에 대비해 의료공간조정, 일부 폐쇄 등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전파는 현재까지는 비말, 접촉 감염이 대부분이므로 확진 환자가 머무는 병실의 공기가 병원 내로 순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음압 1인실이 원칙이다. 음압병실이 없을 시는 최대한 확진환자가 머무는 병실의 공기가 병원 내로 순환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며, 공조기준(일반적으로 외기(30%)와 내기(70%)를 혼합해서 순환시키므로, 공조시설의 개도율을 조정하여 혼합을 막고 외기 100%로 급기, 전배기 방식으로 전환)을 만족하는 일반 입원실에 입원 조치한다. 1인실이 없을 시, 일반 환자와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시킨 병동에 확진환자 다인실 병실로 사용 가능하다. 음압 병상배치 우선순위 고위험군은 의료기술 등이 필요한 환자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65세 이상, 기저질환(만성 폐쇄성폐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환자 등이다.

대전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55개의 음압병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공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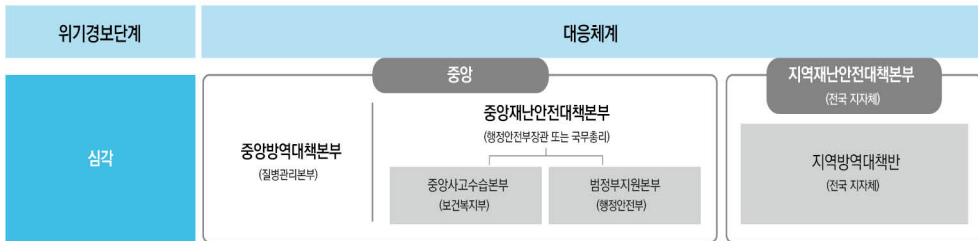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

2015년 중동과 한국에서 유행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는 186명의 환자 중 38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20%에 달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5월 8일 현재 10,822명의 환자 중 256명이 사망해 사망률은 2.37%이다. 이렇게 사망률이 차이는 것은 질병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여러 감염병 대응 경험으로부터 얻은 정부의 효율적인 질병대처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WHO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효과적 대응법으로 언급한 ‘환자들을 ①찾아내 ②검사하고 필요하면 ③치료와 ④격리를 하며 ⑤감염자들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⑥전문가들을 효율적으로 안배’를 잘 해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0년 2월 23일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수준으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적으로 방역에 집중하였다. 감염병 대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역 컨트롤타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의 방역업무를 지원한다. 2차장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그림 4>.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변경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감염병 진단병원과 병상을 확보하고, 수용범위를 넘어서면 중앙에서 병상, 인력, 물자 등의 자원을 지원한다.

그림 4. 우리나라 정부 대응체계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부의 체계적인 노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1) 정부의 감염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진료소의 운영: 전국 638개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95%에 해당하는 606개소에서 직접 검체채취 가능
- 2) 진단검사를 위한 발빠른 노력: 진단검사 실시기관은 전국 118개소로, 공공기관 23개, 의료기관 81개, 수탁검사기관 14개이고, 진단시약은 4월 현재까지 총 5개가 긴급사용승인
- 3) 효율적인 접촉자 격리: 환자 발생 시 중앙·지자체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원을 추적하고 접촉자를 격리 즉 보건교육, 증상모니터링과 함께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 되며,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동선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자가격리자는 1:1 전담 관리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하게 관리

대전시의 경우 재난관리과에서 코로나19대응 총괄을 담당하며 위생안전과와 함께 대응 TF(Task Force) 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현장조치, 예방조치, 현장지휘, 정보제공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자 관리 관련 업무협조에 의거하여 자가격리자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의 코로나19의 전파가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이유는 대전시의 적극적인 검역,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 방역조치 시행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의료계의 효율적인 선별진료와 환자진료 덕분일 것이다.

정부와 대전시의 더 나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몇 가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지역 책임 의료기관 역할에 감염병에 대한 예방, 치료, 관리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공공병원은 거점병원으로서 확진자에 대응하고 추가 감염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병상수는 환자수 대비 10.3%에 불과해 사회적 요구를 다하기 어렵다. OECD 보건 의료통계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1천 명당 12.3개로 OECD 평균 4.7개의 2.6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부족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병원의 약 90%가 공공병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8년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체 병상 수의 10%로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9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 699,033개의 병상 중 격리병상은 3,053개, 국가지정 음압 격리병실(1인실)은 198개이다. 그러므로 감염병을 대비한 병상을 갖춘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그로 인한 손실분 보전, 지역 의료기관의 업무에 감염병에 대한 예방, 치료, 관리 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여 55개의 음압병상을 확보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는 충남대병원 음압병상에서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며, 병상이 부족할 경우 건양대병원, 성모병원, 을지대병원, 선병원 등이 환자를 받게 된다. 또한 대전

시는 확진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음압병상 외에도 격리 치료를 위해 시립 제2노인전문 병원에 164개 병상을 확보해 놓았다. 그러나 감염병이 대구모로 유행하게 되면 음압병동과 격리병실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

2019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침에 의하면 대전시의 음압병상은 충남 대병원의 8병상이 전부이다. 이에 대구모로 유행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음압 병상 등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의 확보가 더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한 업무규정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의료 인력의 확충과 보호장구 등 의료물품의 원활한 공급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대비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군·공공·민간 부분에서 인력을 지원하여 필요한 현장에 파견하였다. 4월 29일 기준 누계 3,729명의 의료 인력이 파견되어, 병원,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검체채취, 환자 치료, 자가격리자 상담 등의 의료 활동을 수행하였다.

2017년 인구 1천 명당 활동하는 의료인력의 수는 OECD는 평균 의사 3.3명, 간호인력 9.5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의사 2.3명(한의사 포함), 간호인력 6.0명(간호조무사 포함)에 불과하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 의과대학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 유희인력 재 고용 추진, 경력단절 방지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간호 인력이 축소되지 않게 간호인력 적정 기준을 마련 하고, 병원인력 기준·요양 시설 인력기준을 강화해 철저한 위생 관리로 감염 가능성을 낮추는 인프라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의료용품 부족으로 치료 및 간호에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도록 병원에 보호장구 등의 의료물품이 원활히 공급되어야 한다. 의료물품이 부족하게 되면 효과적인 치료와 간호를 제공할 수 없다. 각 병원은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외 같은 병원의 일반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보호장구(마스크 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감염병 유행시 의료기관에 의료물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침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실천노력이 요구된다.

세 번째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 체계 확립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한 것처럼 정부와 지자체 내 감염병 대유행 시 빠른 시간 내 효율적으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관(control tower)의 구성이 필요하며, 이 기관이 의료

기관 및 의료인력 관리, 검사관련 업무, 대상자 관리, 지역사회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빠른 시간 내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그 역할 등에 대한 지침과 규정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상 시와 감염병 유행 시 전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담당할 중앙감염병전문기관이 필요하여 이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대전시의 경우에도 감염병 유행 시 빠른 대응을 위해 이를 총괄할 부서와 TF팀을 구성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상 시 지역사회의 감염병 가능성을 연구하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대전시에서는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통해 중장기 추진과제로 시민안심 감염병 관리서비스 강화 내용을 공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공공병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지역사회 중심 결핵관리를 위한 기반 강화,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다. 감염병은 대규모로 유행할 수 있고, 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 있으므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염병에 대한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언론 노출 등을 통해 감염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의 전환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르게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다. 사회적 팬데믹(대유행)의 재발생을 막기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개인 스스로 감염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의 실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은 다음과 같다.

- 제 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제 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제 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제 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제 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참고문헌

-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감염증 특별홈페이지(2020), <http://ncov.mohw.go.kr/baroView.do>
-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2020), <https://www.daejeon.go.kr/corona19/index.do>
- Wikipedia(2020), <https://ko.wikipedia.org/wiki/%EB%B0%94%EC%9D%B4%EB%9F%AC%EC%8A%A4>
- WIKIMEDIA COMMONS(202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3D_medical_animation_coronavirus_structure.jpg
- NIAID(2020), <https://www.niaid.nih.gov/diseases-conditions/coronaviruses>
- 송경애 외(2020), <기본간호학1>, 수문사.
- Wikipedia(2020), <https://ko.wikipedia.org/wiki/%EC%BD%94%EB%A1%9C%EB%82%98%EB%B0%94%EC%9D%B4%EB%9F%AC%EC%8A%A4>
- Google(2020), <https://news.google.com/covid19/map?hl=ko&gl=KR&ceid=KR:ko>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2020),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list_no=366951&act=view
- 중앙방역대책본부(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부록 제 7-4판.
- BBC 뉴스(2020),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1831999>
- 동아사이언스(2020),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6144>
- 의학신문(2020),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546>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홈페이지(2020), <http://kfhr.org/?p=129643>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2020), http://bogun.nodong.org/xe/khmwu_5_7/576026
- 청년의사(2020),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352>
- 병원신문(2020),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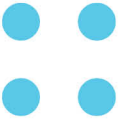
- 메디칼업저버(2020),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09>
- 의협신문(2020),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168>
- 대전일보(2020),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12183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20),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9529
- 대전광역시(2020),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2022.
- 질병관리본부(2019),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침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코로나19로 인한 복지분야의 대응과 과제

● 이 경 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코로나19로 인한 복지분야의 대응과 과제

이경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1. 서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과 팬데믹(Pandemic)으로의 확대는 전 세계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위험현상을 노출하였다. 이는 감염병에 의해 촉발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시험무대가 되었고, 전 국민이 방역에 협조하면서도 사회의 다양한 사각지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재구성 요구가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다행히 감염병의 확산은 성공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 여전히 재확산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매년 반복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향후 보완된 사회적 안전망 체계의 구성에도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전 세계가 지구화되고 재난이 보편화되는 이 시점에서 이번 코로나 감염병 대응과정을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보다 안전한 사회적 안전망 구성을 위해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피고, 감염병 및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II. 사회복지시설의 대응과 문제점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 우한시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발생을 보고한 이후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감염자(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발생하였다. 2020년 2월 18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31번째 감염자가 대구에서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확산이 진행되었고, 2월 23일 정부는 감염증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정부는 휴교령, 대규모 행사금지, 대중교통 운행 제한 등의 조치를 법적 근거에 의거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혼란이 가중되었던 메르스 사태와는 달리 메르스 경험을 기초로 마련하였던 지침에 따라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을 준비하게 된다. 가장 먼저 성남시는 지난 2월 3일을 기준으로 관내 노인이용시설 391곳에 대하여 휴관을 결정하였고,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남 나주시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휴관 조치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면서, 감염병 고위험군 환자들이 있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면회를 제한하고, 외부인 출입 시에는 발열 등의 증상 여부 확인 후 출입을 허가하도록 조치하였다.¹⁾ 특히 2020년 2월 22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정도 대남 병원 환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기로 의료기관에 대한 첫 코호트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치사율은 낮지만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취약 계층 및 노령자 인구집단에 대하여는 강한 전파력으로 치명적인 위험성을 지닌 코로나 19에 대한 감염 차단의 강한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 대전지역의 대응도 전국적인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생활시설은 외부 감염 요인의 차단에 집중하면서 시설 직원에 대한 출퇴근 동선 보고를 통해 불필요한 외부활동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용시설은 휴관조치를 통해 집단감염의 위험성을 줄이고 외부후원발굴을 통해 이용시설 휴관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방문서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들이 방역당국과 일선 복지서비스제공기관과의 상호소통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이라기보다는 감염병 차단이라는 일차적 목표에 집중됨으로써 복지전달체계의 무력함을 강화시키고 현장의 현실이 간과되어 향후 복지전달체계의 재구성을 위해 반드시 고민하여야 할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켰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아쉬움이라 할 것이다.

1) 웰케어이슈, 2020.4.7.

특히 대응과정에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위험성이 큰 코호트 격리 특히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는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부족 및 시장화 논리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방식, 통제 중심 접근의 폐해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1. 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문제점

20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은 특히 정신병동을 중심으로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됨으로써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졌으나, 코호트 격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당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감염병 대응 지침 마련 촉구와 장애인에 대한 긴급구제를 인권위원회에 요청하면서, 격리된 환자들에 대한 충분한 의료인의 확보를 기초로 코호트 격리가 아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인권위원회는 격리된 환자들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을 하면서도 감염병 사태 종결 이후 정신병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거주하는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직권조사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²⁾

이후 경북 지역에서 장애인거주시설 및 요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경기도에서는 3월 1일 노인과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 인구집단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의료 및 거주시설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외부 감염 유입 차단을 위한 예방적 조치는 예견가능성만으로 2주간 거주자 및 직원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조치일 뿐 아니라 의료 및 생활조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충분한 준비조치 없이 이루어진 졸속행정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또한 확진자 없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험구역'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사회적 혐오를 불러올 수 있다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반대 의견이 이어지기도 하였으며,³⁾ 무증상 감염으로 확진자가 격리기간 중 발생할 경우 의료적 치료가능성을 오히려 차단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단지 '예방적 격리조치'라는 정책 발표만으로도 불안감이 증폭되어 이후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거주자의 경우 일반 질환에 의한 병원 진료조차도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예방적)코호트 격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생활시설의 방역 강화와 인력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현장 사후 점검 강화, 서비스

2) 웰페어뉴스, 2020.3.3.

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성명문, 2020.3.10.

대상과 시설 특성을 고려한 보다 상세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안전 및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의 단계적 지원 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⁴⁾

2.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부족

감염병 사태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는 사회 곳곳에서 빈 공간을 확대시켜 나갔고 그 빈공간에서 생존하여야 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방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빈 공간은 보육, 교육, 지역사회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되었으며 이들에 대하여 기존 체계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현장에서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은 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 영역으로 그 책임이 전가되었으며,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대응의 어려움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특히 민간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노숙인을 위한 점심제공 등도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관 반찬배달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보완될 수 없는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나타나 복지사각지대에서는 감염위험보다도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생존의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였음에도 중앙 집중적인 서비스 통제 구조로 인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기회가 부족하였고 취약인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고 할 것이다.

현장의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행정조치들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생존의 문제나 사회적 낙인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히 사회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취약계층의 불안과 우울증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3. 시장화된 바우처 서비스 제공 방식의 문제점

지역사회의 복지관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동이 불편하여 직접적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나 재가노인요양서비스의 경우도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특히 이 영역은 신자유주의의 영향 하에서 구성된 시장화된 바우처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

4) 안수란 (2020), p. 8

어서, 국고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과는 또 다른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사회복지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시설 형태의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에는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염병 초기 확산시기에 개인보호물품의 제공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개인위생용품이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을 구할 수 없는 서비스제공자들은 감염 위험성에 노출되었고 서비스이용자 가정 방문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역설적으로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는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대면서비스의 중단을 권유하면서도 서비스 중단 시 발생할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이나 서비스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서비스 중단으로 겪어야 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니 기관의 생존을 위해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감염병 사태에서 활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방문돌봄서비스와 같은 대면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공인력 대상 지원안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⁵⁾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초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임에도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고,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의 감염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 중단 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시장화된 바우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하여는 향후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4. 통제 중심 접근의 폐해

복지관의 휴관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을 낮출 수 있었다고는 하나 휴관 이후의 서비스 제공 계획이나 기관운영에 대하여서도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도 큰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존 기관운영 방식이 관료적 통제 중심으로 경직된 운영이 되다보니 정작 위험 상황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다보니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외부 후원을 통해 제한적인 도시락 배달서비스만을 수행할 수 있었을 뿐이다. 외부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의 경우는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써

5) 이한나·김유휘 (2020)

무기력함만을 체험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한 언론사의 기사를⁶⁾ 통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접근 방식이 그 국가의 이념적 지향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한 흥미로운 판단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전 지구적으로 경험한 코로나 사태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논쟁을 이어왔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였다. 민주주의가 앞섰던 한국과 자유주의가 앞섰던 서구 유럽과 미국으로 살펴본다면 한국의 대응이 좀 더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자유주의의 가치는 간과되거나 배제될 수 없는 것이라면, 특히 인권과 관련된 자유주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가 전 국민의 생체정보를 감시하고, 동선을 통제하며, 자의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이는 자유주의적 원칙을 유보한 것이다.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를 앞서는 한국의 경우 인권 보장을 위해 이들의 균형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복지전달체계의 재구성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기 공간을 가진 개인들이 없다면, 그런 개인으로 이뤄진 주권자들이 국가 권력을 쉽게 통제의 대상으로 여길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연대에 기초한 건강한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서로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이다.

성공적인 감염방지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불편함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 확진사례가 계속 낮아지면서 기존의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으로 바뀌었지만, 감염의 위험성과 치명적 결과 가능성이 큰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면회금지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보도 기사의 댓글에서 ‘왜 자식들을 자꾸 감염자로 간주해요’라는 하소연은 감염병 이후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⁷⁾

III.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과제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은 한국에서의 방역 결과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련의 성공적인 대응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살펴봄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바람

6) 프레시안, 2020.5.6.

7) 연합뉴스, 2020. 5.7.

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같이 고민하여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민영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

한국에서의 전달체계는 공공부분보다는 민간부분이 차지하는 역할이 더 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정책이 도입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의 개인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시장화가 빠르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도외시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시장에서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경우도 시장부분이라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각자도생에 맡기고 있음으로써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서비스가 시장에서 작동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서비스가 공공성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국가가 개입하고 보호하고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해소하여야 한다. 자원봉사나 외부 후원이 중단된 시점에서 감염으로 인한 서비스 인력 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을 준비하여야 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서비스를 중단하면 적자 가능성이 큰 수가체계를 제시하고 서비스 중단을 권고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논의가 제기되어야 한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참여를 허용한 이상 공공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배치나 재정적 지원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미 비영리적 운영을 강제하면서도 시장영역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는 모습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이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경우 시장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기에 오히려 국가의 서비스 공급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무형 재화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가 갖고 있는 본질에 충실하자면 국가 책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논의 중인 사회복지서비스원을 초기 논의구조로 되돌려 대대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부족을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원을 제한적인 방향에서 현재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영역을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영역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변화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 상태의 시장화는 서비스 왜곡과 서비스 이용자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시설의 자율성 강화

성공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서비스 중단과 관련된 상호소통의 기회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성공적인 방역 뒤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배려되지 않고 형식적인 자율성에 의존하여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보장되지 않고 서비스 중단 시 클라이언트에 대한 대안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서비스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고, 개인위생용품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별 시설들이 준비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의 경직성 때문이다. 다양한 급어를 세금에 의해 지급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통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나친 규제 위주의 제도 시행은 다양하게 변하는 사회 현상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차단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수급자격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통제 위주의 제도시행으로는 복지 사각지대가 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것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 사회의 성숙이 필요하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국가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역역에서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인력의 확보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에 따라 제공되다보니 복지 정보에 대한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여서 촘촘한 복지 안정망 구축을 위해서는 여전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상당한 자율권을 허용하여 복지 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것으로 이제는 경제적 논리나 효율성 기준에서 추진되었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통제나 규제 방식의 접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3. 위험사회에 대한 인식

전통적인 위험 분석은 주로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충격의 크기에 의해서 좌우되었고, 이런 기술과학적인 접근은 위험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즉 공평성의 문제, 사회적 가치의

문제, 공간과 시간에 따른 인식 차이 문제 등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 비용—편익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위험 평가도 전반적인 사회 차원의 영향 변수와 고려 변수를 무시하는 측면이 있기에 과학기술적인 위험 분석뿐 아니라 개인, 조직,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필요성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이번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화 문제가 확산되고,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이 조장되면 사회 전체가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위험사회’를 저술한 올리히 벡의 “위험분배의 역사는 부와 마찬가지로 위험이 계급유형에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그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즉 부는 상층에 축적되지만 위험은 하층에 축적된다”는 주장⁸⁾은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감염병 사태에서 나타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인구를 보호하고 사회복지현장에서 나타난 모순적인 상황, 즉 생활시설은 외부자원의 단절로 업무가 가중되고, 이용시설은 ‘수퍼전파자’의 낙인을 피하면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위험한 업무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전달체계 재구성이라는 과제 속에서 민주화와 함께 동의와 참여, 협상 재해석, 그리고 가능한 저항의 네트워크가 권위와 사법의 공식적인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구조를 가로질러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⁹⁾

4. 돌봄국가에 대한 논의

최근 복지국가 논쟁에서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돌봄과 의존’이라는 주제를 통해서도 감염병 사태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인구층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성공적인 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돌봄(Care)의 위기를 보여줬다고 본다. 이는 단순히 전 세계를 괴롭힌 새로운 병원균의 출현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로서 인간 그 자체보다 경제적 이윤을 우선시하는 관리의 위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¹⁰⁾

더불어 현 복지국가의 위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존’을 부정적이거나 이 상태에서 벗어나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숙명적으로 겪어야 하는 존재론적 사실로 받아들일 때 극복가능하다. 이는 복지국가가 특정 인구집단을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8) 올리히 벡(1997) p. 75

9) 올리히 벡(1997), p. 299

10) The Care Collective, 2020, 3, 26.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모두의 상호의존성을 배려하고 인식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복지국가의 재정립에서 돌봄윤리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며, 의존은 보편적이고 정상적이기에 취약한 의존인에게 돌봄을 제공하여야 하는 외면할 수 없는 윤리적 의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¹¹⁾

자유주의 이론에 따른 복지국가는 사회를 자유롭고 평등하며 비의존적이고 생산적인 개인들의 결사체로 정의하지만, 돌봄국가는 돌봄 필요를 제공하는 윤리적 의무에 따라서 사적 영역이나 개인 간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영역으로 확장된다. 돌봄윤리에 대한 공적 책임, 즉 돌봄의 공공윤리가 바로 정의의 원칙이며,¹²⁾ 돌봄은 친족 간의 친밀성(intimacy)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도서관, 학교, 공원 등의 지역사회와 우리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도 기존의 복지체계가 보여준 위계적이고 성분리적인 접근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민주적인 참여를 촉진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5.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본소득 논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제적 위축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전면에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시적 지원금으로서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기적이고 연속적인 기본소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면서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되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위험(지급과 같은 감염병 재난뿐만 아니라 실업이나 질병, 사망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며, 정책수행을 위한 자원 확보의 문제가 있음에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정책이 될 수 있다. 다만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복지 급여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회복지급여와 병행하여 갈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논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소득의 성격 및 실행가능성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1) 김희강(2016), p. 9

12) 김희강(2016), p.12

감염병 이전에도 서구에서 기본소득의 논의가 활발해진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4차 산업 혁명의 출현으로, AI의 발전과 함께 축소되거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북유럽국가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 해소 대안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자리의 질이 감소되는 시대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였다.¹³⁾

실제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실시 여부는 아직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기존 한국의 복지국가 체계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기본소득은 감염병 사태에서 촉발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속성과 무조건성, 공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성공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방역 대응에 대한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 상황에서 기존 체계의 경직성이 노출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경직성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갑자기 나타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의되고 비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거나 변화되지 못했던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복지체계가 갖고 있던 위계성이라든가 성분리성, 중앙 정부 중심적이고 경제적 효율성이나 성과에 집중된 정책의 한계성이 분명히 나타난 것이다. 또한 경제적 역량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 중심의 이념에 치우치며 복지재정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기존 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나타난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삶의 질 개선을 책임지는 복지정책에서 재정 확대 없이 효율성만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결정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도 강화되어야 한다. 모든 정책은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변화하는 상황에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낙인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때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시민사회는 인간성의 회복, 즉 스스로를 그리고 동시에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가치를 확대하여야 하며, 공동체에 대한 연대와 자아에 대한 존중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균형을 포괄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수익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환경과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을 포괄한다. 각자도생의 전쟁터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¹⁴⁾

참고문헌

- 가이 스탠딩(2018),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효상 역, 창비
- 김희강(2016), 돌봄국가: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평, <정부학연구> 제22권 제1호, 5-30
- 율리히 벡(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역, 새물결
- 안수란(2020),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대응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1호, 보건사회연구원
- 이한나 · 김유휘(202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의 대응과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 378호, 보건사회연구원
- 연합뉴스, 2020. 5.7. 요양시설 면회 방안 만든다...당국 "간막이 · 화상면담 등 검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592799&isYeonhapFlash=Y&rc=N>
- 웰페어이슈, 2020.4.7.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라"...코로나19에 맞선 두달간 사회복지계 분투기(전진호 기자),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5>
- 웰페어뉴스, 2020.3.3. 코로나19 진정되면 정신병원 ·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할 것(정두리 기자),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3012>
- 프레시안, 2020.5.6. 'K방역'의 성취가 도달한 그곳에, 'K불평등'도 있었다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0614173067144>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성명문, 2020.3.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welfare.net/site/ViewPolicyStatement.action>
- 한국일보 2020.4.28. 김호기의 굿모닝 2020s, 각자도생 전쟁터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원해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260897785670>
- The Care Collective, 2020.3.26, COVID-19 pandemic: A Crisis of Care, <https://www.versobooks.com/blogs/4617-covid-19-pandemic-a-crisis-of-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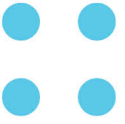
14) 한국일보 2020.4.28.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분야 전망과 대책

●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분야 전망과 대책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머리말

금년 들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과거 경험해 보지 않았던 매우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금번의 경제 위기는 한국경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여러 위기들과는 그 원인이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산업 및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위기는 과거와는 달리 범세계적인 외부 환경과의 단절 속에서 생산, 투자, 소득 및 소비의 전 영역에 있어서 모든 경제주체들의 활동 영역을 위축시키고, 행동 양식에 있어서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견실한 보건의료체계의 관리를 통해 정부와 국민의 일체화된 노력으로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잘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산업체의 영역이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여러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전망하고, 코로나19가 향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미치게 될 여러 가지 경제적 변화 전망을 살펴보고,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몇가지 경제적 관점에서의 대응과제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II.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 주요국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자국 내부적으로는 이동 제한 및 통제, 자가격리, 휴교 및 재택근무, 공공·문화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입국·해외여행 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중국·이란·EU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자국민의 해외 출국도 금지하여 사실상 국경을 폐쇄하였다. EU 역시 국경을 30일간 폐쇄하고 EU 회원국 내에서도 30일간 여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림 1.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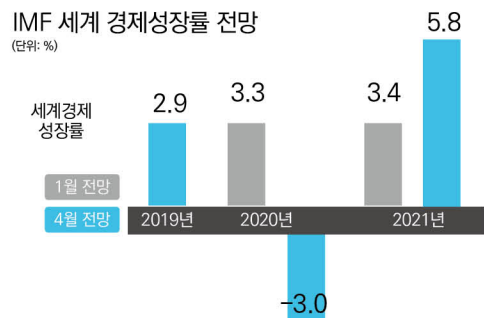


표 1. 주요국가 IMF 경제성장률 전망

()는 소비자물가

	2019년	2020년		2021년	
		1월	4월	1월	4월
세계	2.9	3.3	-3.0	3.4	5.8
선진국	1.7(1.4)	1.6(1.7)	-6.1(0.5)	1.6(1.9)	4.5(1.5)
미국	2.3	2.0	-5.9	1.7	4.7
유로존	1.2	1.3	-7.5	1.4	4.7
독일	0.6	1.1	-7.0	1.4	5.2
프랑스	1.3	1.3	-7.2	1.3	4.5
이탈리아	0.3	0.5	-9.1	0.7	4.8
스페인	2.0	1.6	-8.0	1.6	4.3
일본	0.7	0.7	-5.2	0.5	3.0
영국	1.4	1.4	-6.5	1.5	4.0
캐나다	1.6	1.8	-6.2	1.8	4.2
기타 선진국	1.7	1.9	-4.6	2.4	4.5
한국	2.0	2.2	-1.2	2.7	3.4
신흥개도국	3.7(5.0)	4.4(4.6)	-1.0(4.6)	4.6(4.5)	6.6(4.5)
중국	6.1	6.0	1.2	5.8	9.2
인도	4.2	5.8	1.9	6.5	7.4
러시아	1.3	1.9	-5.5	2.0	3.5
브라질	1.1	2.2	-5.3	2.3	2.9
멕시코	-0.1	1.0	-6.6	1.6	3.0
사우디	0.3	1.9	-2.3	2.2	2.9
남아공	0.2	0.8	-5.8	1.0	4.0

* 한국 2020년 1월 WEO 업데이트에는 불포함, 2020년 2월 IMF의 G20 감시보고서 수치

자료 : 기획재정부 20.04.14 전진우 그래픽 기자 618tue@newsis.com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국가 차원의 이동 제한 움직임, 자발적인 접촉 및 이동 기피 현상으로 세계경제의 인적 물적 흐름이 매우 제한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인적·물적 이동, 여행, 관광과 관련된 항공·숙박·외식·물류·해운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감염자의 사망 및 자가격리, 공장 조업 제한 및 공장 폐쇄 등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 금융시장 역시 크게 동요하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국의 주가는 2019년 말 대비 약 2개월 반 만에 많게는 50% 가까이 하락하였다. 주요국 통화가치 역시 같은 기간 달러화 대비 10% 내외로 절하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매우 어두운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다(나라경제, 2020.04호).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이 종전의 SARS, 신종인플루엔자, MERS에 비해 확산세가 더욱 커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 동향(2020.4.)에 따르면 중소기업경기전망은 2014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소제조업 생산, 출하 등 생산 관련 지표가 다시 둔화세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제조업과 개인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둔화시킴으로써 지역의 생산-고용-소득-소비의 순환을 크게 축소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III. 대전경제 부문별 코로나19의 영향

코로나19의 지속은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 위축을 초래하면서 지역적으로도 생산, 소비의 감축을 불가피하게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제조업의 경우 다수의 기업이 생산 및 매출액 감소에 따른 기업 도산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한 여러 서비스업종의 경우에 있어서도 매출 감소 지속에 따라 사업장 폐쇄 혹은 일시 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전후 비교를 통해 대전지역의 소비지출 변화, 소비심리 및 체감경기 등의 동향을 살펴보고 고용상황을 가능한 지표 분석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진단해 볼 수 있다.

대전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 감소

코로나 19 바이러스 지역 감염자가 발생한 2월 이후 대전지역의 대형소매점, 백화점, 대형마트 판매액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대형소매점은 3월 기준 전월 대비 3.1%, 전년동월 대비 24.8%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의 경우 3월 기준 전월 대비 11.8%, 전년동월대비 37.1% 각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대형마트는 3월 기준 전월 대비 5.3% 증가, 전년동월대비 1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대형소매점 판매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항목	2020. 01	2020. 02	2020. 03	전월비	2019. 03	전년동월비
대형소매점	195,872	148,507	143,956	-3.1	191,422	-24.8
백화점	93,409	72,378	63,816	-11.8	101,411	-37.1
대형마트	102,463	76,129	80,140	5.3	90,011	-11.0

주 : 2020년 2월과 3월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대전지역 개인신용카드 사용액 감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초 지역 감염자가 발생한 2월을 기준으로 볼 때, 대전지역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하여 2월 기준 전월 대비 16.7%, 전년동월대비 6.0%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45.7%), 여행/교통(-42.9%), 의류/잡화(-16.0%) 등의 항목에서 감소한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소비지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경우 35.8%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 개인신용카드 사용액

(단위 : 백만원, %)

항목	2019.12	2020.01	2020.02	전월비	2019.02	전년동월비
합계	962,281	933,959	778,019	-16.7	827,960	-6.0
종합소매	177,512	174,110	142,716	-18.0	148,218	-3.7
전자상거래/통신판매	5,031	4,845	5,452	12.5	4,016	35.8
식료품	31,648	40,530	26,005	-35.8	30,649	-15.2
의류/잡화	36,580	32,288	26,437	-18.1	31,485	-16.0
연료	80,099	78,752	73,313	-6.9	69,507	5.5

항목	2019.12	2020.01	2020.02	전월비	2019.02	전년동월비
가구/가전	25,774	24,418	24,807	1.6	29,285	-15.3
의료/보건	124,452	124,454	119,607	-3.9	104,191	14.8
자동차	24,265	20,702	20,713	0.1	38,162	-45.7
여행/교통	128,841	126,682	57,398	-54.7	100,576	-42.9
오락/문화	28,541	25,333	21,245	-16.1	23,542	-9.8
교육	29,396	30,035	29,603	-1.4	29,426	0.6
숙박/음식	163,416	140,865	120,029	-14.8	125,430	-4.3
공과금/개인 및 전문 서비스	30,142	31,764	27,757	-12.6	25,754	7.8
금융/보험	410	340	440	29.4	231	90.5
기타	76,174	78,840	82,497	4.6	67,490	22.2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소비자 심리 지수 하락

한편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 96.3을 기록하였으나 3월에는 82.0, 4월에는 75.4로 크게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6.6p, 전년동월대비 28.4p 하락하여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2020년 4월 현재생활형편 CSI는 전월 대비 6p 하락한 79.0를 기록하여, 현재경기판단 CSI는 전월대비 10.0p 하락한 32.0을 기록하고 있다.

표 4. 대전·충남 소비자 동향조사

항목	2020. 02	2020. 03	2020. 04	전월차	2019. 04	전년동월차
현재생활형편CSI	95.0	85.0	79.0	-6.0	94.0	-15.0
생활형편전망CSI	68.0	42.0	32.0	-10.0	74.0	-42.0
현재경기판단CSI	94.0	83.0	81.0	-2.0	99.0	-18.0
향후경기전망CSI	78.0	64.0	64.0	0.0	82.0	-18.0
소비지출전망	104.0	98.0	90.0	-8.0	111.0	-21.0
소비자심리지수	96.3	82.0	75.4	-6.6	103.8	-28.4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는 충격이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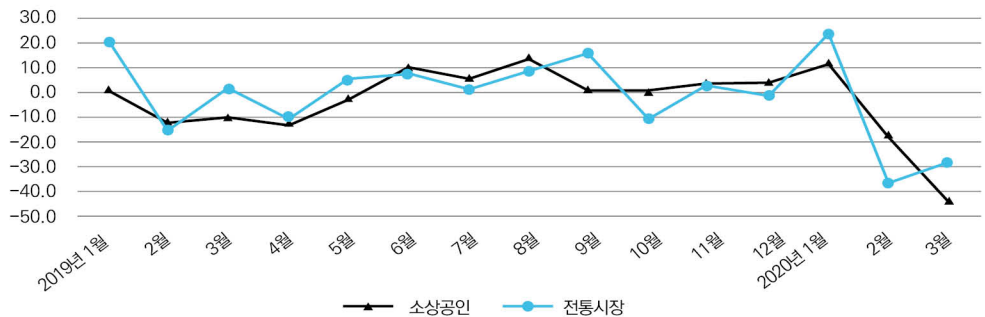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지표인 소상공인 BSI는 33.0으로 전월대비 6.4p, 전년 동월대비 43.8p 각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전통시장 BSI는 39.7로 전월대비 14.1p 상승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에 있어서는 27.6p 하락하였다. 전통시장 BSI는 2020년 2월 25.6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하였고, 2019년 2월대비 36.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 BSI

항목	2020. 02	2020. 03	2020. 04	전월차	2019. 04	전년동월차
소상공인	39.4	33.0	78.4	45.4	76.8	13.4
전통시장	25.6	39.7	80.8	41.0	67.4	30.8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조업 여건 변화 예측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전지역 제조업 업황 경기실사지수(BSI) 역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코로나 19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의 기업경기 체감과 기업 활동 위축에 상당 수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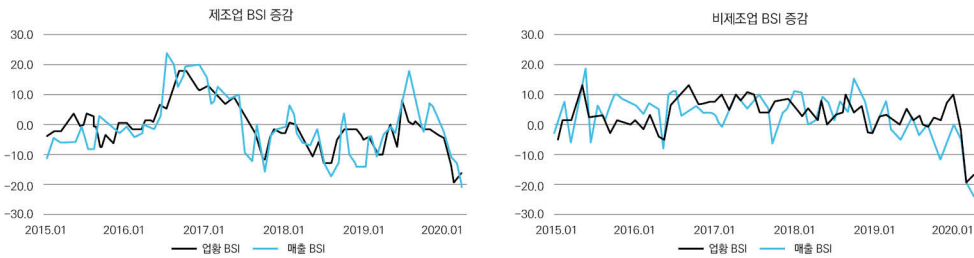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4월 중 업황이 전월보다 1p 하락하였으며, 전년동월보다 1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4월 중 업황이 전월보다 2p 상승하였으나, 전년동월보다 2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 될 경우 BSI지수 하락은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되며, 대전지역의 기업 활동 위축은 지역의 생산 감소, 내수 부진, 수출 부진 등 지역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대전 기업경기실사지수 추이

구분		2020. 02	2020. 03	2020. 04	전월차	2019. 04	전년동월차
대전 제조업 BSI	업황	67	51	50	-1	66	-16
	전망	73	70	51	-19	74	-23
	매출	71	63	57	-6	78	-21
대전 비제조업 BSI	업황	71	46	48	2	72	-24
	전망	76	71	50	-21	73	-23
	매출	69	53	43	-10	77	-34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고용 불안정성

지역의 고용상황을 월 단위로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실업급여지급 수의 경우 2020년 2월 15,747명, 3월 18,073명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각각 12.8%, 17.2% 증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정 상황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56.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51.2%), 운수 및 창고업(48.0%)의 실업자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업종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7. 실업급여지급자수 동향

(단위 : 명, %)

구분	실업급여지급자수			전년동월대비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합계	14,416	15,747	18,073	5.2	12.8	17.2	
농업, 임업 및 어업	22	24	28	-12.0	0.0	40.0	
광업/제조업	광업	4	4	6	-20.0	0.0	-25.0
	제조업	1,976	2,075	2,178	3.7	9.0	9.0
건설업	2,039	2,402	2,603	6.0	10.7	13.5	
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1	55	60	-1.9	7.8	17.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47	160	162	13.1	21.2	26.6
	도매 및 소매업	1,425	1,473	1,629	1.1	9.4	13.0

구 분		실업급여지급자수			전년동월대비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433	490	580	16.4	29.6	48.0
	숙박 및 음식점업	984	984	1,257	22.5	23.8	56.7
	정보통신업	400	466	514	4.4	17.4	27.5
	금융 및 보험업	271	325	339	8.0	7.6	5.3
	부동산업	535	562	587	11.5	24.1	20.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95	762	867	-5.4	2.7	14.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83	1,705	1,866	-7.3	-2.6	-0.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66	1,129	1,051	16.8	32.0	47.0
	교육 서비스업	627	629	1,018	11.8	18.5	16.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32	1,819	2,598	3.7	17.1	14.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41	262	257	45.2	54.1	5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85	421	473	-0.8	5.8	13.7
	국제 및 외국기관	0	0	0	-	-	-

자료 : EIS 고용행정통계

IV.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분야 변화 전망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경제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장소적 접근성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방식의 생활패턴을 지양하면서 지금까지의 소비패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원자재와 부품, 소재 등 중간재를 포함하여 필수적인 제품의 국내 생산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고용 환경의 변화와 소득 흐름의 변화에 따른 사회불안정 요인 등이 발생함으로써 이를 해소하는 국면에서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소득 보전 등 다각적인 방식의 사회안정망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의 코로나19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분야의 변화 예측에 관한 여러 전문가들의 시각과 연구자료들에 기초하여 특히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 향후 국가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핵심적인 과제들을 도출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 재편

코로나19는 우선 먼저 산업 재편이 새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간의 이동이 상당기간 제한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장소적 접근성을 최소화 하는 면대면 방식의 생활패턴이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반영한 산업 재편이 큰 폭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성장세가 정체 또는 후퇴할 산업으로 '관광(항공, 여행, 호텔)', '교육(유학생, 학원)', '공연·영화', '음식점', '유통(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부분)', '제조업' 등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반해 성장세가 상승할 부문은 '재택근무용 클라우드 컴퓨팅 IT인프라', '1인 제조와 자동화', '온라인쇼핑', '화상회의 플랫폼', '케이블TV·넷플릭스·스트리밍 동영상', '물류(택배, 배달)', '원격 진료' 등으로 디지털화의 급속한 확산과 결합하면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국내 생산기반 확대 추세 가속화

현재까지의 코로나19의 전개 양상,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2차, 3차 코로나 바이러스의 범세계적 확산 지속에 따라 국가간의 교역이 위축되면서 국민의 보건으로 필수 품목의 수급 제한이 심각한 국민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지금까지의 해외 의존 품목들의 자국내 생산 전환이 급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은 비단 보건으로 품목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필수품을 비롯하여 각종 제조업의 중간 부품, 원자재 등의 자급자족적 생산이 일정 수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근의 글로벌 공급 시스템 붕괴로 인해 겪고 있는 각국의 산업 생산활동의 불안정적인 경험은 지금까지의 국제분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이익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필수적인 품목들에 대해 자국에서 자체 생산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국가 단위에 있어서 식량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업과 식품 산업 역시 국가의 보호 대상 또는 국유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식량 자원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포함한 각종 주요 지하자원 역시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V.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대응 과제

국내 생산 리턴 증대와 글로벌 가치 사슬 다핵화

금번 코로나19의 범세계화 진전은 보호무역주의의 보다 심각한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간의 이동제한은 세계경제에 있어서 공급망의 왜곡과 교란,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자국내 구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결국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생산 리턴으로 이어지고, 지금까지의 국가간 분업체계의 일정 수준 결별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지만 많은 국가들이 자국내 생산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 수준에 있어서 해외 투자와 해외 진출기업의 존속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입지 재검토-현지 존속 혹은 국내 리턴에 대한-가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은 이번 기회에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국내 유틸을 통해 자국내 생산-고용-소득-소비의 거시적 선순환 구조를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다핵화를 통해 장기적 효율성과 안전성을 추구하면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과 업무의 스마트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국경 간에 구축된 가치사슬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생과 신뢰에 기초한 통상정책의 추진과 경제 외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나라경제 2020년5월호).

K브랜드 이미지 활용, 신성장 산업 분야 확장성

다른 한편에 있어서 금번 방역 과정에서 의료보건 분야에 있어서 확립된 K브랜드 이미지가 향후 각 분야에 있어서 세계시장 진출의 중요한 자산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은 단기적으로는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일정 기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번 위기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전문가들이 다수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질서와 경제활동 변화의 큰 흐름에 잘 대처하여 국가와 민간부문이 협력해서 적절하게 선제적으로 잘 대응한다면, 이번 위기는 한국경제가 질적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으로 다가올 사회경제적인 변화 중에서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네가지로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나라경제 2020년5월호).

이 부분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환경에 크게 기대하는 대전지역 경제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소위 언택트(untact, 비대면) 경제의 확산이다. 소매유통업과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가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구조 개편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이 쇠퇴하는 반면, 스마트 스토어, 원격진료, 프리랜서와 재택근무(스마트 워크), 사이버 교육,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이다. 공급망과 유통망의 신속성과 응답성(re-sponsiveness)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데이터, 네트워크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신기술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생산-유통-판매에 이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순차적이고 수직적인 공급사슬이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롭게 전문화된 중소기업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셋째,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화와 개방화를 통해 형성된 글로벌 공급체인(GSC; Global Supply Chain)의 신뢰성과 위험도가 재평가되면서 국가 간 분업과 무역체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도 해외 생산 중 일부를 리쇼어링해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글로벌 공급체인에 새롭게 편입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전망이다.

넷째, 코로나19는 현재에 있어서도 보건의료, 생명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있어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행히 현 국면에서 대덕밸리의 여러 관련 기업과 연구소, 대학들이 이러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K브랜드 이미지는 벤처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며, K브랜드는 한국의 의료용 진단기기나 약품을 만드는 바이오벤처와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식품을 비롯한 소비재 제조업, IT를 비롯한 서비스업 분야에서 벤처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할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전망이다(나라경제 2020년5월호).

VI. 맺음말

금번 코로나19의 위기는 분명 국가경제, 지역경제 모두 매우 혹독한 시련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 산업부문에 있어서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이에 따라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역내 소득 흐름도 큰 폭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소비 흐름도 크게 위축되어 있다.

이러한 민간 산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름 열정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피해의 심각성을 각 세부 업종별 특성을 살펴서 세심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코로나19 위기는 본 글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어려운 현실 여건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적절히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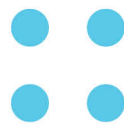
- 기초과학연구원(IBS), 「코로나19 과학리포트: 코로나19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 2020.
- 기획재정부, 「제1·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자료」, 2020.
- 나라경제 2020년4월호, 「불확실성 커지는 세계경제」.
- 나라경제 2020년5월호, 「코로나19 이후의 세상,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코로나19 사태의 주요국 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2020.2.
- 부산연구원, 부산발전포럼 : 「코로나19 이후 부산 경제 사회 문화 과제」, 2020.4.
-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297호,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 방안」, 2020.4.
- 중앙시사매거진, 「전문가가 말하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경제 전망」, 2020.4.
- 코로나19-경제위기 대응 범대책위 준비모임, 「코로나19-경제위기」: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2020.4.
- KPMG,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과 기업의 대응전략」, 2020.4.
- <http://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s=00002000040000100001&cid=12477>
- <http://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s=00002000040000100001&cid=12520>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와 향후 전망

●
이혜미 경희대학교 교수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와 향후 전망



이해미 경희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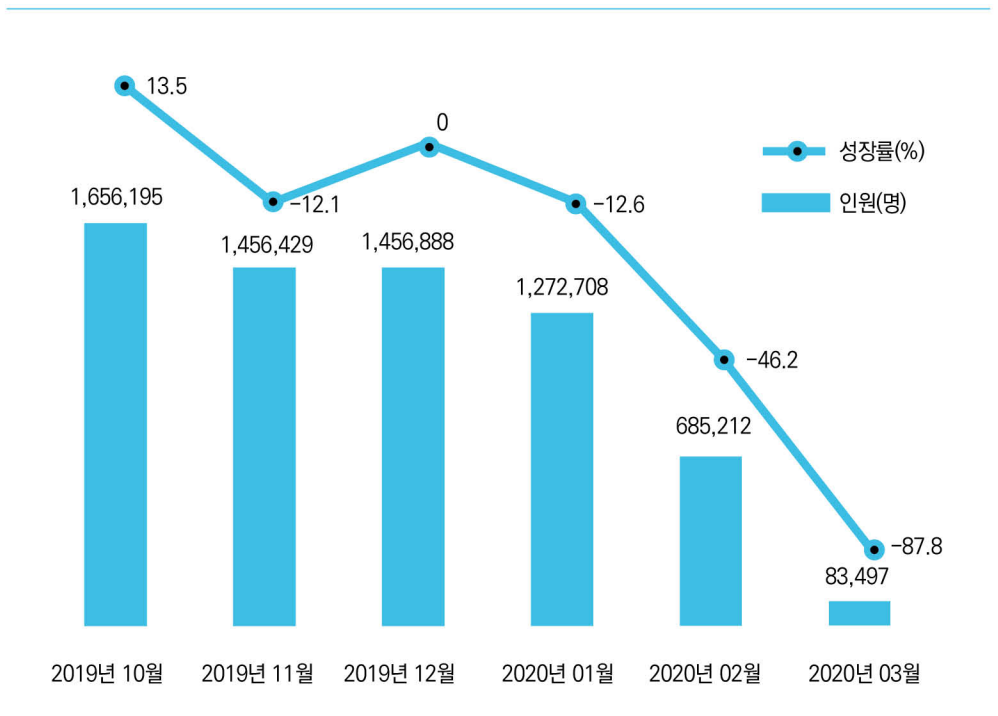
1. 코로나19와 관광 현황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 11일 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팬데믹(pandemic)선언을 하였다. 팬데믹은 위험수준에 따라 경보단계를 1~6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높은 단계인 6단계¹⁾를 의미한다. 6단계 팬데믹은 동물간 전염, 사람간 대량 전염을 나타낸다. 이러한 팬데믹의 선언은 각 국의 봉쇄정책과 폐쇄정책을 발생시켰으며, 국가 간의 문을 더욱더 단단하게 걸어 잠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은 전 세계를 감염공포에 떨게 만들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거나 외국인의 국가 내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에 따라 외국으로의 여행이 막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외국으로의 여행뿐만 아니라 국내여행에서도 코로나19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감염의 확대를 막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방식은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어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로 인해 야외활동 및 여행, 레저 등은 불가능해지면서 관광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1) 1단계는 동물에 한정된 감염, 2단계는 동물 간 전염을 넘어 소수의 사람에게 감염된 상태, 3단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이 증가된 상태, 4단계는 사람들 간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할 초기 상태, 5단계는 감염이 널리 확산돼 최소 2개국에서 병이 유행하는 상태를 말한다. 6단계인 팬데믹은 5단계를 넘어 다른 대륙의 국가에까지 추가 감염이 발생한 상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광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지역 간 이동이 자제됨은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기피함에 따라 국내 관광 수요는 위축되고, 외래관광객의 방한 또한 급격히 감소하였다. 즉, 사람의 이동이나 교역이 제한을 받게 되면서 관광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심각해지고 특히 항공업과 여행업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 결국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관광행위자 모두를 패닉으로 만들었다. 코로나19의 발생 전·후의 외래 관광객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0월 165만명이 한국을 방문하였으나 중국 우한발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11월과 12월에는 145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중국 코로나19의 확산이 국내에서도 나타나면서 2020년 1월에는 전월 대비 -12.6%의 입국 감소를 나타내었고 2020년 2월 68만명(-46.2%), 3월 83만명(-87.8%)으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외래 관광객의 감소는 사실상 관광산업의 중단을 의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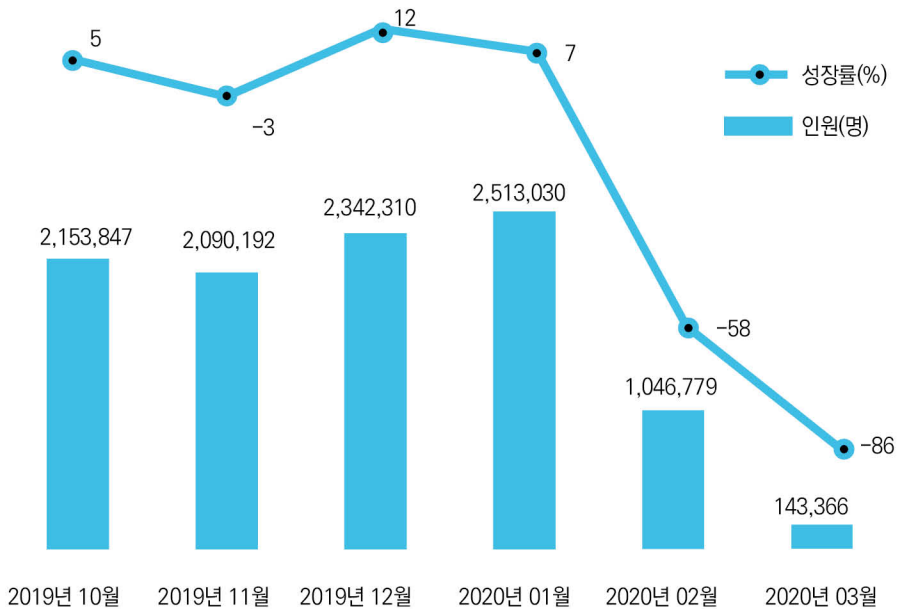
그림 1. 외래관광객 입국 현황(2019. 10 ~ 2020. 03)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know.tour.go.kr/>)

내국인의 출국현황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2020년 2월 104만명으로 전월대비 -58%의 급격한 하락률을 나타내었고 3월에는 14만명으로 전월대비 -86%의 하락을 나타내었다. 결국 외래관광객의 입국감소와 내국인의 출국감소는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내국인 출국 현황(2019. 10 ~ 2020. 03)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know.tour.go.kr/>)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은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그 피해규모 또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경우 월 2,000억 정도의 비용 지출 손실이 나는 상황이며, 여행업계 1위인 하나투어의 경우 월 100억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또한 호텔업계의 전체적 손실액은 2020년 4월 말 기준 3조가 넘는 상황으로 관광업계 전반에 걸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나아가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종사자들은 정부의 휴업·휴직으로 인한 유급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으나 장기화 될 경우 구조조정 및 기업계 폐업이 속출될 전망으로 고용 환경 또한 어두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이 처한 상황을 지켜보고 많은 국가의

경제에 중요하고 큰 역할을 담당해왔던 관광 산업의 재발전을 위한 미래 대책 방안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II.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산업의 피해

코로나19가 관광업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 매우 치명적이다. 코로나19로 국내에서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 주요 노선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3월 기준 176개국 이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여객수요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인천공항 일 평균 여객은 2019년 3월 기준 19만 명에서 2020년 3월 기준 1.6만 명으로 91.6%가 감소하였다. 급격한 감소는 항공사와 공항에도 심각한 매출 피해를 가져왔으며, 악화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재정적으로 튼튼하지 못한 항공사부터 도산하고 결국 항공산업이 무너질 수 있게 된다. 특히 단거리 노선을 위주로 운항하는 LCC(Low-Cost Carrier)항공사의 경우 셋다운과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항공사의 경우 폐업 절차를 밟은 곳도 있는데 이는 항공 노선 운항 중단에 따른 영업수익 감소뿐 아니라, 항공기들의 발이 묶이며 주기장 사용료 증가로 인해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직원들의 유급 휴식, 휴업, 희망퇴직 등 인건비 감소를 자구책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따르고 있다. 항공사의 심각한 상태는 공항의 모습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데, 수천 명의 여행자가 도착하거나 출발하던 번잡한 공항이 복도나 주차장과 같이 텅 비어 있고, 도착과 출발을 보여주는 화면만이 커져있는 유명 장소가 되었다. 호황기를 맞이하던 면세점 또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등 관광 전반에 걸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관광업계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내 여행산업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은 주3일 근무제, 유급 또는 무급 휴가 등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 여행사들은 영업 중지, 폐업까지 고려하며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서울시 관광협회가 집계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31일부터 5월 11일 까지 132일 동안 피해 업체수는 172개, 피해액은 1,993억 원을 넘어섰다. 취소건수 또한 44만 건을 넘어 관광산업의 피해는 매우 심각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관광협회에서 제공하는 피해 현황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1,000억 원이 넘는 피해금액은 코로나19에 따른 산업 위기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 동향

업종	피해접수업체	취소건수	취소인원(명)	피해금액(원)
국내·외여행업	25	841	27,070	6,284,646,070
국내여행업	4	155	1,010	2,857,415,090
국외여행업	50	9,578	25,777	10,571,382,911
일반여행업	49	214,191	281,714	157,523,265,559
관광호텔업	14	29,487	27,256	9,180,459,472
관광식당업	12	5,170	50,290	1,494,097,000
기념품판매(면세)	3	1,106	29,024	4,116,072,000
국제회의기획업	3	23	-	1,934,800,000
숙박업	2	30	13	9,500,000
기타	10	2,847	5,227	5,409,902,840
총합	172	263,428	447,381	199,381,540,942

자료 :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동향(20.05.11기준)

숙박업의 경우 관광협회의 집계 결과 피해 접수가 2건이고 피해액은 950만원의 미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감독하는 호텔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탓이며, 실제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호텔산업은 예약건이 90% 이상 취소되고 매출 또한 작년대비 약 60~90% 감소되면서 휴업 및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심각한 피해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호텔에서는 휴업을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휴업 공지를 하지 않더라도 OTA(Online Travel Agency)에서 판매되는 객실 상품을 회수하여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호텔이 2차 감염을 우려하여 객실 판매를 최소화하고 뷔페 레스토랑에서 단품 메뉴를 판매하는 등 고객과의 접촉을 줄이고 있으며, 피트니스, 실내수영장, 사우나 등 감염이 우려되는 부대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방침을 내세웠다. 한국호텔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사태로 대부분 호텔의 사업 목표가 70~80% 가량 하향 조정되었으며, 사태 지속여부에 따라 피해가 불어날 경우 중소형 호텔이나 지방 호텔, 업력이 오래되지 않은 신규 호텔들은 경영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서울에 위치한 호텔의 경우 '드라이브스루' 전용 메뉴를 개발하여 고객이 전화나 홈페이지로 메뉴를 예약하면 지정 장소에 주차된 차로 직원이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일부 호텔은 격리 대상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비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에 따른 성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교 및 모든 행사가 축소되면서接客 및 이벤트부문뿐만 아니라 사진, 비디오 촬영, 전자 운송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에어비앤비(Airbnb) 또한 어려움에

쳐한 실정이다.

국제관계에도 코로나19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3월 9일 한국인과 중국인의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는 5월말까지 적용된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는 3월 시행된 이후 매달 연장되고 있어 해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국 정부도 일본의 정책에 상응하는 일본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본인이 한국 입국 시 2주간 격리조치도 취하고 있다. 즉, 일본인의 한국 관광 길이 완전히 막혔고 양국 간의 관광 교류 또한 완전히 중단된 상태이다. 결국 이러한 조치는 향후 양국 간의 관광교류를 정상화 하는데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 또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국내 중국인 입국 금지 등은 국가 간의 교류 중단을 의미하며, 결국 관광객의 이동 중단을 의미한다.

Ⅲ.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 현황

관광은 다른 산업보다 외부 또는 내부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위해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또한, 유원시설업 재산세 감면, 호텔업 재산세 감면, 지자체 소유 국제회의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위해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용 지원, 세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총 21건의 대책과 약 8,00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용지원, 세제지원, 호텔등급심사 유예, 방역물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등급심사 유예의 경우 코로나19로 관광호텔의 등급 심사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긴급 개정, 호텔등급심사를 4월 말부터 감염전과 종료 시까지 유예(약 호텔 350개 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관광업계 어려움 회복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느끼는 종사자들의 체감은 상상 이상이다.

서울시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 살리기에 나섰다. 관광업계에 낮은 금리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로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서울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관광시장 상황에 따라 업계 긴급 지원과 관광수요 창출, 관광 생태계 강화 등 3개 단계로 구성하고 긴급지원의 경우 경영

난에 처한 관광업체에 특별용자, 공공일자리, 보험 가입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한다. 특별용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 협력자금 등 5000억 원을 활용해 관광업체에 연 1.5%의 고정금리로 제공하고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 휴직 등에 들어간 업체 종사자에게는 공공일 자리를 제공하였다.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는 관광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관광산업의 가뭄을 해소시키는데 역부족인 실정이다.

지원 대책은 우선적으로 관광목적지로서 한국의 안전성을 확인시키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관광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생활권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안전한 장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안전에 대한 신뢰는 한국관광을 주저하는 외국인에게 안전성을 확인시킬 수 있는 기회로 한국이 관광객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널리 확산시키고, 관광객의 안전한 관광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관광시설의 청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향후 코로나19가 소강상태를 보일 경우 외래 관광객의 한국방문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였던 외래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출입국 편의제고와 더불어 국가 간 관광협력, 각종 외래 관광객 대상 이벤트 개최, 지역별 특화마케팅 실시 등 가시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 결국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고 안심하고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안심관광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외래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관광객의 여행 회복에도 집중해야 한다. 내국인의 국내관광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취소·지연되었던 지역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를 추진하고, 관광주간을 다시 선정하는 등 국내관광캠페인, 지역특화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추진 등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관광공사에서 실시한 제주여행계획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여행 대체지로 제주를 선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난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정부의 대응은 관광산업의 회복과 복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정부나 국제기구 등의 노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에서도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관광산업 자체를 살려내기 위한 특별한 지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관광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관광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관광산업은 코로나19의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회복이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이 늦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관광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관광산업 모두의 노력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IV.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산업의 전망

세계화로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이로 인한 전염병의 전파력은 막강해졌다. 현재 그 누구도 코로나19 이후의 상황 전개에 대해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세계 전반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관광산업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것이다. 특히 항공산업은 국내 수출주도성장의 발전을 이끈 주요한 산업으로 항공교통의 대중화를 이루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항공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으며, 경영악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항공산업만의 문제가 아닌 호텔, 여행사 등 모든 관광산업이 직면한 문제이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은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한다면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산업의 변화를 예측해보면 첫째, 온라인과 같은 비대면 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이나 교류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10~20년에 걸쳐 천천히 변화했을 비대면의 시대가 앞당겨졌다. 결국 사람을 직접 마주할 때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비대면시 얻을 수 있는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안정적으로 관계를 갖는 삶의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망들 속에서 인바운드 여행 산업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즉, 언택트(untact)가 관광산업에 침투하게 되는 것이다. 관광산업은 이제까지 언택트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분야였다. 열차나, 항공기, 버스와 같은 이동 수단에서 숙박, 식사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종사자와 대면하지 않고서는 여행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가장 직접적인 발생이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광산업 트렌드 또한 언택트, 또는 컨택트의 최소화가 새로운 관광산업을 이끌게 될 것이다.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이 직원과 직접적인 대면 없이 객실에서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하고 룸서비스를 통해 식사 역시 객실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언택트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브 스트리밍 관광, 프라이빗 호캉스, 청결 테마 패키지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동수단의 경우 키오스크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직원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이용하는 시설이 점점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언택트 현상은 관광산업에서 긍정적으로만 바로 볼 수 없다. 고용창출이 타 산업보다 높은 산업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관광산업에 기술을 기반으로한 언택트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세계여행관광위원회(WTTC)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여행관광산업에서 5,000만명의 대량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광산업에 더욱 극심하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고용창출과 언택트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국외여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 관광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이 주춤할수록 국내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즉, 해외의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는 한 국내여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먼 거리 관광을 선호한 대부분의 전 세계 관광객들과 관광업계는 관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이러한 국내관광 흐름의 기회를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대안이 없어서 국내 여행을 선택하지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 대중은 다시 국내 여행을 차갑게 외면할 것이다. 결국 새로운 관광의 변화에 따라 잠재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셋째,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으로 관광형태가 완전히 변화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개별여행객이 추세였으나, 코로나19 이후 개별여행객의 증가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그들의 욕구도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는 비대면 문화를 생성하고 있다. 즉, 단체여행의 일부 편리함으로 아직도 많은 단체관광객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낯선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는 비즈니스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기피하는 여행상품이 될 것이며, 국가 간 이동이 이전처럼 자유롭지 못할 경우 단체관광객 비자 발급에도 제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광객들은 가족, 연인, 친구 단위의 소규모 여행을 선호하면서 타인과의 접촉은 최소화하는 안전한 여행을 추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특히 개별여행의 확대는 다양한 개별여행상품의 출시로 이어질 것이다.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이 등장할 것이며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안전하고 개별 취향에 맞는 개인 맞춤형 여행상품들이 등장하여 개별여행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실내 또는 많은 인파가 밀집 되는 관광지를 방문하는 여행에서 벗어나 야외 위주의

프라이빗(private) 관광으로 개편될 것이다. 제한된 공간에 많은 인파가 밀집되어 있을 때 순식간에 수많은 인원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밀집된 공간이 아닌 개방된 공간이나 장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매일 수천에서 수만 명의 현지 이용객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는 더 이상 관광객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감염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야외에서 소규모 또는 단독 활동이 가장 안전한 관광목적지가 될 것이다. 기존에도 프라이빗 관광 상품은 존재했지만, 대부분은 고가의 맞춤형 상품으로 가성비 측면에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선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지나간 여행산업에는 이런 변화를 반영한 상품들이 대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코로나19는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의 제한, 항공, 여행산업의 글로벌 침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모습의 관광산업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대해 종식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역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만큼 국내 지역 이동이나 관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을 위해서는 업계에 대한 이해, 업계 관계자의 소비자에 대한 이해 등 관광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관들의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는 상황이다. 모든 것이 멈춘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 정책 및 경기 부양책 측면에서 정부의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리더십은 위기가 진정 될 때까지 이들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필수적 요인이다.

V. 맺음말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의 확산은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며 많은 산업과 기업이 붕괴되고, 개인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관광산업에는 운영중단, 실업률 상승, 기업도산 등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코로나19로 인한 패닉 상황이 하향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약 3개월 정도의 회복기간이 필요로 된다. 이는 확진자가 감소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 추세가 주춤해지게 되고 이후 관광산업과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정부의 투자와 금융권의 자금이 원활하게 풀리면서 국내 관광산업은 정상화와 회복기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완화되고 나아가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바이러스 전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지 않는다면 관광 산업의 정상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경기관광공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국내 여행이 1위(47%)로 꼽히기도 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여행에 대한 욕구가 폭발하는 시점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장기적 침체가 어떻게 변화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를 잘 이겨낸다면 관광산업의 호황은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5월 황금연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다녀오는 등 향후 국내 코로나19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바이러스를 막는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관광산업의 정상화와 회복기를 가져올 것이며, 관광객들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해외여행, 놀이동산 방문, 영화관 방문 등 보복적 소비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소비심리를 관광기업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실효성 높은 대책의 마련을 통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또한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 세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발생에 따른 관광산업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시스템과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등의 대응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바이러스의 진화와 변형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향후 이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관광산업과 정부는 위기를 직면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관광과 관련한 학계에서도 호텔, 여행, 관광, 이벤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기반의 데이터 중심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강화하여 관광업계의 재건에 기여해야 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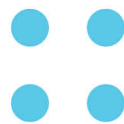
- 류광훈(2015), “메르스 사태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와 향후 과제” 『한국관광정책』, (제61권) 8-17
- 박희석 · 반정화 · 정현철 · 김수진(2020),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 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32
- 서울특별시관광협회, 2020.05.11.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동향(<http://www.sta.or.kr/>)
- 오유라(2020), “코로나19의 관광분야 영향 및 전망” UNWTO, IATA, ADB, McKinsey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143호,
- 전병열(2020), “코로나 바이러스’확산으로 관광산업 절체절명의 위기”, 『문화관광저널』.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know.tour.go.kr/>)
- 문화체육관광부(<https://www.mcst.go.kr/kor/main.jsp>)
- 한국공항공사(<https://www.airport.co.kr/>)
- 한국관광공사(<http://kto.visitkorea.or.kr/kor,kto>)
- 한국호텔업협회(<http://www.hotelskorea.or.kr/main/main.php>)
- 호텔앤드레스토랑(<http://www.hotelrestaurant.co.kr/>)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가축감염병으로 인한 중장기적 환경재난 대응방향

● 김건하 한남대학교 교수

가축감염병으로 인한 중장기적 환경재난 대응방향

김건하 한남대학교 교수

05

1. 가축감염병 관련 환경이슈

중국에서 보고되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백신이 없어 대응이 매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SARS),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A(H1N1)대유행,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을 겪은 바 있다. 특히 MERS를 겪으면서 관련정책, 의료자원, 조직정비, 대응매뉴얼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보건복지부, 2016),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활용되고 있다. 코로나19에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때 가축감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 또한 백신이 없고 확산속도가 매우 빠른 특징이 있다.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살처분이 사용되고 있으며, 살처분된 사육을 처리하기 위한 매몰지가 조성된다. 2010년 겨울 발생한 대규모 구제역(Foot-and Mouth Disease, 이하 FMD)으로 국가경제에 대한 악영향과 더불어 매몰지에서 유출되는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오염이 결국 공공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국민적인 우려가 높았다. 침출수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형저장조를 이용한 매몰이 조성되고 있으나 통상 3년인 매몰지 관리기간이 종료된 후 후속처리방안이 없고 부패가 종료되지 않은 잔존물의 매립지 반입금지, 수변지역 소각금지, 사육의 퇴비화 금지 등 복잡한 관련 법

규를 고려하지 않아, 현장에서 그 실효성은 제한적이다(조호성, 2012). 코로나19로 인하여 바이러스 감염, 확산, 또한 대응책으로서 차단방역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이하 AI) 외,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이하 BSE, 광우병)과 같은 가축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매몰지와 관련된 환경오염을 환기시키고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과 기술을 검토함으로써 공공복지를 위협하는 바이러스 감염위험에 대응하고자 한다.

ASF는 출혈열의 특징을 갖고 바이러스의 병원성이 다양하며 급성인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하며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성 돼지 질병으로 양돈 산업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발생 국가에서 식량 안전성 확보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신속히 국제적으로 전파하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간 전파 동물질병이다(MAFRAa, 2018).

ASF의 잠복기는 바이러스 숙주 및 감염경로에 따라 4~19일 사이이며, 임상 증상을 나타내기 전 24-48시간에 감염성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ASF 바이러스는 혈청 내에서는 실온에서 18개월, 냉장고에서는 6년, 혈액 내에서는 37°C에서 1개월간 감염이 지속된다. ASF 바이러스는 pH 4-10의 범위에서 안정하며 혈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일간 활성화를 유지한다. ASF 바이러스는 광범위한 환경 요인에 대해서 현저하게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의 소독제만 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SF 바이러스 전파는 직접접촉, 감염 돼지의 배설물이나 분비액 접촉으로 인한 간접접촉, 파리와 같은 매개체를 통한 감염 경로를 거친다(MAFRA, 2018a, USDA, 2019). 특히 차량 타이어, 기구 및 작업자 의류 등을 통한 간접접촉에 의한 감염확산에 주의해야 한다.(MAFRA, 2018a).

[표 1]은 2018년 이후의 아시아국가의 ASF 발생 건과 살처분 두수를 보이고 있다(OIE, 2020a). ASF 발생건수 및 살처분 두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베트남이며, 누적 발생 건수 8,500건에 853만 두가 살처분되었다. 한국은 2019년 9월 18일 첫 사례가 보고되었고, 2020년 5월 10일 현재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570건이 발생하였으며, 살처분 포함 ASF로 손실된 두수는 26,999두이다(OIE, 2020a).

표 1. 2018년 이후 아시아국가의 ASF 발생건수 및 살처분 두수

Country	Total Outbreak	Ongoing Outbreak	Total animal losses within this update
Cambodia	13	0	3,673
China(PRC)	179	15	381,365
Hong Kong	3	0	4,163
Indonesia	521	521	38,123
Korea(DPRK)	1	1	99
Korea(Rep.of)	570	570	26,999
Laos	141	141	38,773
Mongolia	11	0	2855
Myanmar	6	1	81
P.New Guinea	4	4	397
Philippines	285	285	275,978
Russia	92	5	2860
Timor-Leste	126	126	405
Vietnam	8,501	2,383	5,932,092
Total	10,436	4,033	6,707,863

자료: OIE, 2020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이하 AI)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닭·칠면조·오리 등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난다. 이중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세계 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위험도가 높아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발생시 OIE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MAFRAB).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345건, 2017년 107건의 고병원성조류독감이 발생한 바 있다(OIE, 2020b).

AI는 주로 직접접촉에 의해서 전파될 수 있어, 감염된 닭의 분변 1그램에는 십만 내지 백만 마리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들어있다. 이러한 분변이 오염된 차량(특히 분뇨차량)이나 사람, 사료, 사양 관리기구 등을 통해 전염이 일어나며, 가까운 거리는 오염된 쥐나 야생조류에 의하여도 전파될 수 있다. 양계장 내의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는 오염된 물·사료, 기침시의 비말 등에 의해서도 전염될 수 있으며, 바로 인접한 농가 간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공기 중의 부유물이 바람에 의해 이동됨으로써 전파가 일어나는 것도 가능하다(MAFRAB).

FMD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및 야생 반추동물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거품섞인 침흘림,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 가피, 궤양 등이 나타나며,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전염병

이다. FMD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지정하고 있다(MAFRAc, 2018). 2010년, 2011년 FMD의 발생으로 인하여 약 348만 마리(소 151,425마리, 돼지 3,318,299마리, 염소 8,071마리, 사슴 4,583마리)가 살처분되었고 4,583 매몰지에 매몰되었다. 최근 국내 FMD 발생 사례는 2017년 2월 B군에서 발생하여 소 195두가 살처분, 2018년 3월 G시에서 발생하여 돼지 1058두 살처분, 2019년 1월 A시에서 발생하여 소 120두가 살처분되었다(OIE, 2020b).

FMD 바이러스는 pH 7.0~8.5 범위, 낮은 온도에서 안정적이지만 FMD 바이러스는 산성 용액에서 불안정하며, pH 5.0의 경우 불활성화 속도는 초당 90%이다(Bastos 등, 2000). 이 바이러스는 변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온 및 일부 세정제에 의해서 활동이 억제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또한 알칼리성 용액에서 불안정하며, 2%의 수산화나트륨(NaOH) 및 수산화칼륨(KOH), 탄산칼슘(CaCO₃)는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소독제로 사용된다(Bastos 등, 2000, Alexandersen 등, 2003).

BSE란 전염성해면상뇌증(TSE;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의 일종으로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병으로서 일명 광우병 또는 프리온 질병(Prion Diseases)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 질병은 변형 프리온 단백질 감염에 의한 신경세포의 공포변성과 중추신경조직의 해면상 변화가 특징으로 2년~5년의 다양하고 긴 잠복기와 불안,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 등 임상증상을 보이다가 결국은 100% 폐사되는 치명적인 만성 진행성 질병이다(APQA, 2020).

BSE는 1986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국내에서는 1990년에 발병하여 1992년에 최고조에 달하였다. 2005년까지 179건의 사례가 있으며, 예방조치로 소 440만두를 살처분하였다(Belay 등, 2005). 이는 1988년 반추동물의 사료를 금지하기 전까지 병에 감염된 소조직을 가축의 골분사료의 재료로 사용하면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DEFRA, 2001).

BSE의 가장 큰 특징은 잠복기가 최대 5년으로 매우 길다는 것이고 전염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다. 감염된 가축의 섭취를 통해서 사람에게까지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을 유발하는데, 영국에서는 64명이 사망한 바 있다(Maignien 등, 1999). BSE는 열처리, 소독제, 방사선을 이용한 불활성 처리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다. BSE 단백질은 토양표면에 흡착되어 분해속도가 매우 느리다(Saunders 등, 2008). 현재까지 국내에는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에 이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역대책으로써 철저한 검역을 통하여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반추류 동물이나 그 생산물(우유 및 유제품, 원피 제외)이 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축질병의 특성이 다양하고 그 바이러스의 확산방법, 사멸기작이 상이하지만 가축질병에 대응하는 방법, 특히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살처분에 의한 대량사육의 처분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육을 매몰하거나 관리기간이 종료되어 매몰지를 폐기하는 등 전반적인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I. 감염사육 관리방법

가축질병의 확산을 늦추기 위한 방법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살처분 및 매몰이다. 이는 발생원 주변의 감수성이 높은 가축을 미리 살처분함으로써 바이러스의 감염 및 재감염의 고리를 끊거나 늦추는 것을 말한다. 가축사육 밀집지역에서 사육의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처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체의 처분 방법에 대한 지침은 각 질병마다 매우 유사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FMD, AI, ASF로 인한 사육의 처분방법을 살펴보면, AI의 경우, 살처분된 사체는 대형저장조, 간이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FRP) 저장조, 랜더링, 소각, 미생물처리 등 친환경적 매몰처분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들 방법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적절한 장소에 매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각 및 이동식 소각시설, 이동식 열처리시설, 랜더링처리도 제시되어 있다(MAFRA, 2018b). 매몰지는 사체처분을 위하여 토양을 굴삭하고 바닥 및 측면에 비닐을 포설한 후 침출수 저류조 및 유공관을 설치하고 사체를 투입한 후, 매몰지 상부에 성토를 하고 불투수재를 포설하는 방법이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원인병원균을 차폐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침출수누출 우려가 높다.

FMD와 ASF로 인한 사육의 처리방법은 공히 액비 대형저장조 및 간이 FRP 등 저장조를 활용한 사체처리, 랜더링 처리, 소각 및 이동식 소각시설, 이동식 열처리시설, 매몰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MAFRA 2018a, MAFRA 2018c). 특기할만한 점은 ASF바이러스의 환경내 지속성이 FMD 바이러스보다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몰이 허용되어 있고, 심지어 매몰지 침출수의 양정과 분뇨처리장 반입처리를 제시하고 있어 간접접촉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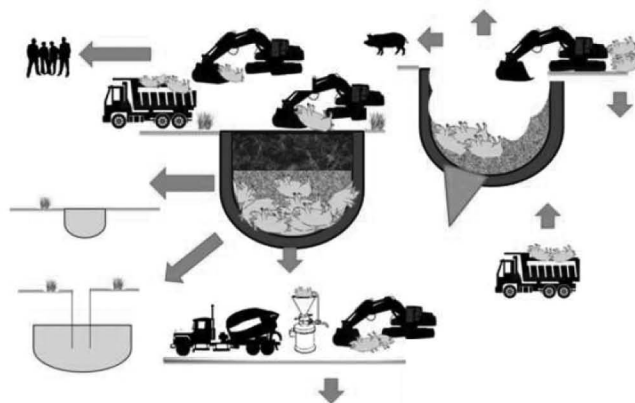
EU에서는 가축사체의 매몰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육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생태계

먹이사슬로 유입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조호성 등, 2012). 최근 사육이 매몰된 후 3년간의 발굴금지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매몰지를 소멸시키려는 요구가 높는데, 가축매몰지의 조성 관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축주, 토지주, 정부, 지자체 등 다양하므로 그들간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축주와 토지주는 매몰지를 조기 소멸하고 부지 재사용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매몰지의 소멸, 매몰부지 재사용과 관련된 행정적, 기술적인 기반은 취약하다(김진하, 2018).

공기로 전파되는 가축질병 확산과 관련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하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침’에 따르면 3년간의 매몰지 관리기간에도 병원체가 음성인 경우 발굴하여 열처리, 소각이 가능하다(MAFRA, 2017b). 매몰지 소멸처리를 위한 미분해 사체처리 방법에 따르면 관측정 수질측정 및 병원체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나 미분해 사체가 남아있는 가축매몰지는 미분해 사체 및 잔존물을 전부 발굴한 후 소각 또는 열처리하거나 농장내 퇴비장에서 퇴비와 교반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가축사체와 열처리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MAFRA, 2017b).

그러나 이와 같이 관리기간이 종료된 매몰지를 폐쇄시키면서 미분해 사육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보건 및 환경을 위협하게 된다. 다음 [그림 1]은 가축매몰지 이설 또는 제거 시 발생할 수 있는 보건상 위해를 보이고 있다(Weeks 등, 2015). 매몰된 사육이 완전히 부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몰지를 개장할 때 병원성폐기물과 매몰지 조성자재, 침출수로 오염된 토양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보건상 위해가 발생한다.

그림 1. 가축매몰지 이설 또는 제거시 발생하는 보건상 위해 개념



사체 자체는 약 70%의 수분을 함유한 부패성 유기물질이므로 매몰된 가축 사체에는 병원성미생물과 바이러스가 존재하며 사체 매몰 후 부패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와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미생물을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매몰지 주변의 토양 및 수계환경은 오염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가축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관리방안(MOE, 2017)에 따르면 침출수내 존재할 가능성 있는 병원균으로는 *E.coli* O157:H7, *Campylobacter*, *Salmonella*, *Leptospira*, *Clostridium*, *Crystosporidium*, *Giardia*, BSE 프리온이 있다.

대형액비저장조 또는 간이 FRP저장조를 이용하여 사축을 매몰한 경우 관리기간이 경과된 후 매몰지 폐쇄시 발생할 수 있는 잔존물은 미분해사축, 저장조폐기물 등이다. 일반매몰지를 이설하여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FRP, PE(Polyethylene)재질 저장조로 이설한 경우, 일반매몰지와 유사한 잔존폐기물이 발생하고, 질병발생시 사축을 직접 매몰한 경우, 미분해사축이 발생한다(김건하, 2018).

저장조를 이용한 매몰지 이설사례를 고찰하여 보면 사축분해가 완료된 경우는 드물며, 함유율이 낮은 미분해 사축과 다량의 폐자재가 발생한다. 또한 이설시 저장조가 파괴되므로 도리어 일반매몰지에 비하여 소멸이 까다롭다(김건하, 2018).

[표 2]는 매몰지 이설과 관련된 환경오염 개연성과 보건상 위험요인을 보이고 있다(Weeks 등, 2015). 미분해된 사체가 있는 매몰지 상부의 복토층을 제거하고 매몰지 사체를 임시적 치장으로 이송하며, 매몰지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 이송중 침출수와 사체의 유실가능성, 미분해사축을 최종처분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발생가능한 오염물질과 노출경로, 오염물질로 인한 수용체를 제시하고 있다.

표 2. 매몰지 이설과 관련된 환경·보건상 위험요인

단계	오염물질	노출경로	수용체
매몰지 상부 복토층제거	병원균, 화학물질, 침출수 및 부패물질, 먼지 및 포자, 약취, 영양염류	공기 흡입, 분진을 매개로한 감염, 침출수 및 병원균으로 오염된 지하수, 상수원의 오염, 조류 또는 야생 동물에 의한 노출된 사체 포식	현장근로자, 상수원, 가축/농민, 공공보건, 야생동물, 농지, 토양과 퇴적물
매몰지 사체 운송 및 임시적치장으로 이동	공기 중, 물 및 토양 관련 병원체, 화학 물질, 침출수 및 부패 된 물질, 먼지 및 포자의 방출 가능성, 미부패 잔존물	사체운송 중 발생하는 침출수 누출 및 분진의 확산	현장근로자, 상수원, 가축/농민, 공공보건, 야생동물, 농지, 토양과 퇴적물

단계	오염물질	노출경로	수용체
침출수로 오염된 매몰지 폐기물 최종처분 및 토양의 복원	공기확산 및 지하수확산 병원체, 화학 물질, 침출수로 오염된 토양, 먼지 및 포자의 방출 가능성, 토양 또는 상수원에 유입되는 침출수, 병원균과 화학 물질로 오염된 침출수	공기 흡입, 분진을 매개로한 감염, 침출수 및 병원균으로 오염된 지하수, 상수원의 오염, 조류 또는 야생 동물에 의한 노출된 사체 포식	현장근로자, 상수원, 가축/농민, 공공보건, 야생동물, 농지, 토양과 퇴적물
사체의 운반 중 유실	토양 또는 지하수에 유입되는 침출수, 병원균 및 화학 물질로 오염 된 침출수	지하수 및 상수원으로 유출	현장근로자, 상수원, 가축/농민, 공공보건, 야생동물, 농지, 토양과 퇴적물
사체의 재매몰 또는 최종처분을 위한 처리	공기 및 토양 관련 병원체, 액상 오염물질 및 화학 물질, 침출수 및 부패된 물질, 먼지 및 포자의 방출 가능성	공기 흡입, 분진을 매개로한 감염, 침출수 및 병원균으로 오염된 지하수, 상수원의 오염, 조류 또는 야생 동물에 의한 노출된 사체 포식	현장근로자, 상수원, 가축/농민, 공공보건, 야생동물, 농지, 토양과 퇴적물

자료: Weeks 등, 2015.

관리기간이 종료된 매몰지의 미분해 사축을 파내어 최종처분하는 매몰지폐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건상, 환경상 위해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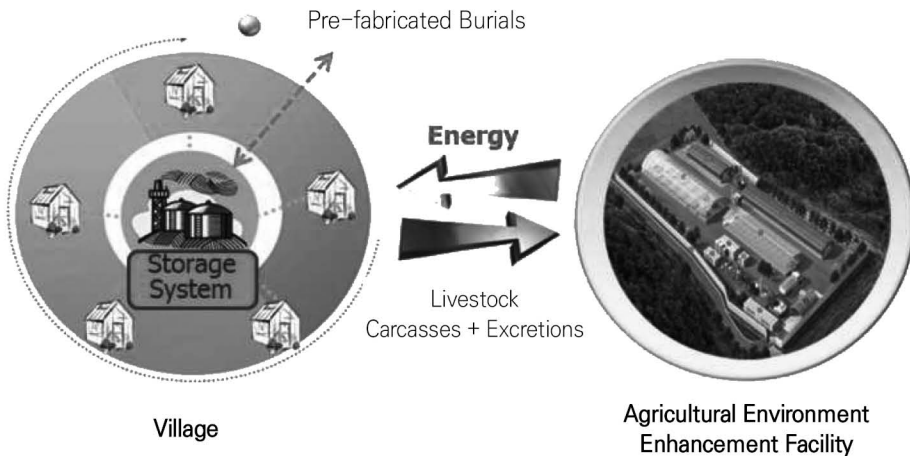
III. 가축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방역의 필요

가축전염병은 일단 발생하면, 감염된 가축의 살처분, 위험지역과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해야 할 뿐아니라 축산물의 식용소비 급감 및 수출중단으로 인해 관련업계에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단방역이 매우 중요하다. 차단방역(biosecurity)이란 축산농가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위해요소를 최소화하는 일련의 우수위생 관리규범이다(조호성 등, 2012). 2010년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 원인 중 하나로 분뇨수거차량과 축산농가에 접근한 외부인으로 인한 확산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축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질병과 지역특성에 따라 적합한 실행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축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방역의 구성요소는 1) 오염원 접촉 기회 차단, 2) 병원체 전파 매개체의 청결 유지, 3) 질병의 농가 유입 차단, 4) 교차오염 가능성 차단, 5) 원인질병 임상증상 예찰,

6) 환축 또는 폐사축 신속신고 등이다(조호성 등, 2012). 특히 교통수단에 의하여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으며, 바이러스 확산 시에는 교통 또는 인력의 왕래로 인한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Vinners 등, 2012).

다음 [그림 2]는 설성수 등(2017)이 제안하는 사축처리시설의 개념을 보이고 있다. 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에 사축처리시설을 조성하고 유역단위 오염물질 처리체계를 재구성하는 개념인데 이는 사축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과 법규에서 수용될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오염물질로 간주하는 것이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처리시설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림 2]를 좀 더 설명하자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사축이 발생하면 이를 미리 준비한 임시저장시설에서 보관한다. 이러한 임시보관시설은 대체로 반경 3 km로 구성되는 차단방역선 단위로 구성되며 전염병 확산이 종료되면 사축은 사축자원화센터로 반입된다. 이 시설의 목적은 차단방역을 준수하면서 사축체적을 저감시키며 잔존물을 기존 환경기초시설로 연계처리한다.

그림 2. 사축처리시설이 유역단위 오염물질 처리체계를 고려한 역할



자료: 설성수 등, 2017

IV. 요약 및 정책제언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감염병으로, 감염속도가 빠르고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며 백신이 없어 감염확산에 대응이 어렵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 정도를 낮추기 위한 역량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가축감염병에 대한 대응과 유사하다. 가축질병 바이러스는 환경내 지속성과 감염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2010~2011년 구제역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제시한 토론을 근거로 정책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질병발생 후 확산 차단, 질병원 감쇄 유도과 같은 현안 중심의 기술개발 및 정책과 더불어 질병발생 요인을 줄이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보건과 공공복지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단편적인 기술과 정책은 중장기적인 대응에 적합하지 않으며 미래의 새로운 공공보건 위협을 인지하기 못할 뿐 아니라 대응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미지의 위협에 대한 이슈를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2)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안전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즉, 사회경제적으로 대규모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방과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가축매몰지는 전염성 병원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조성되었으므로 잠재적으로 인수공통 병원체 또는 공기전파 바이러스가 매몰지에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환경관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는 종래와 완전히 다른 수준의 기술과 관리체계를 요구하며, 환경기술 뿐 아니라 방역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한다. 축소관점에서 대응하면 재난에 적절하지 않으며 과잉대응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3)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기술적 대안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나, 미분해 사육으로 인한 잠재적인 보건상 위해에 대응하는 기술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역 단위 사육처리시설을 건립하여 방역체계와 환경오염처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방안이 될수 있다. 감염사육을 매개체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와 공학적인 대응, 이를 포괄하는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은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참고문헌

- 김건하(2018), “가축매몰지 소멸시 잔존물 처리방안” 『대한상하수도학회지』(제32권).
- 보건복지부(2016), 『2015 메르스백서』.
- 설성수 등(2017),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육자원화센터 제언” 『환경정책』(제24권).
- 조호성 등(2012),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에 있어 차단방역의 필요 및 절차” 『한국물환경학회지』.
- Alexandersen, S. 등(2003), “The Pathogenesis and Diagnosis of Foot-and-Mouth Disease”. 『Journal of Comparative Pathology』(제129권).
- APQA (2020), “What is Bovine Spongiform Bovine Encephalopathy (BSE)?”. from http://www.qia.go.kr/animal/prevent/ani_bse.jsp.
- Bastos, A.D.S. 등(2000), “Natural transmission of foot-and-mouth disease virus between African buffalo (*Syncerus caffer*) and impala (*Aepyceros melampus*) in the Kruger National Park, South Africa”. 『Epidemiology and Infection』 (제124권).
- Belay, E.D. 등(2005), “Creutzfeldt–Jakob Disease Surveillance and Diagnosis”. 『Clinical Infectious Diseases』(제41권).
- DEFRA(2001),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in Great Britain: A Progress Report”. available at: www.defra.gov.uk.
- Maignien, T. 등(1999), “Pathogenesis of the oral route of infection of mice with scrapie and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s”. 『The Journal of general virology』(제80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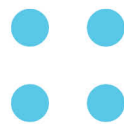
- MAFRA(2018a), "African Swine Fever Special Operation Procedure (SOP)".
- MAFRA(2018b), "Avian Influenza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OP)".
- MAFRA(2018c), "Foot-and Mouth Disease Special Operation Procedure(SOP)".
- MOE(2017), "Guide for Environmental Monitoring of Livestock Burials".
- OIE(2020a), "Situational updates of ASF in Asia and the Pacific." from <https://rr-asia.oie.int/en/projects/asf/situational-updates-of-asf/>.
- OIE(2020b), "World Anim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from https://www.oie.int/wahis_2/public/wahid.php/Countryinformation/Countryreports.
- Saunders, S.E. 등(2008), "Prions in the environment". 『Prion』(제2권).
- USDA(2019), "Disease Response Strategy African Swine Fever". U. S. Department of Agriculture.
- Vinnerås, B. 등(2012), "Biosecurity aspects and pathogen inactivation in acidified high risk animal by-products".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health. Part A』 (제47권).
- Weeks, J. 등(2015), 『Assessment of Risk Reduction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of Burials』.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적 이슈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적 이슈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이

경제사회 전반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막강한 탓에 국내의 언론에서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확진자 규모와 한심한 대처를 부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어떤 통계 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피해 규모는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 아래 표는 현재까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그동안 선진국이라 일컬어져왔던 유럽과 북미의 국가들만 별도로 집계한 것이다. 일본처럼 비상식적 대응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도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 코로나 발생률의 통계는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가별로 인구 규모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십만 명당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을 적용하여 GNI 3만2천달러 이상의 경제적 역량을 지닌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벨기에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다. 물론 벨기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코로나 확진 후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요양원이나 자가 격리 중 사망자까지 집계하고 있다(다른 국가들은 그 수치가 빠져있는 것이다). 그 비율이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보정하면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벨기에가 최고 피해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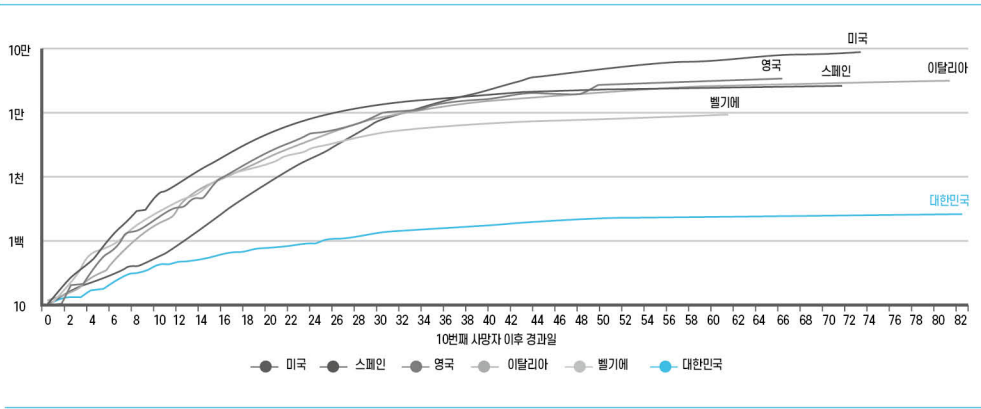
표 1.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이(2020.5.13. 현재, 자료: 웹사이트 CoronaBoard)

사망률 순위	국가	발생률 순위	확진자(명)	십만명당 발생률(명)	사망자(명)	십만명당 사망률(명)	1인당GNI (달러)
1	벨기에	3	55,280	477.0	9,052	78.1	51,740
2	스페인	1	277,719	594.0	27,650	59.1	39,800
3	이탈리아	5	224,760	371.7	31,763	52.5	42,290
4	영국	6	240,161	353.8	34,466	50.8	45,350
5	프랑스	11	142,291	218.0	27,625	42.3	46,360
6	스웨덴	8	29,677	293.9	3,674	36.4	54,030
7	네덜란드	10	43,870	256.0	5,670	33.1	56,890
8	아일랜드	2	24,048	487.0	1,533	31.0	67,050
9	미국	4	1,507,798	455.5	90,113	27.2	63,690
10	스위스	7	30,587	353.4	1,879	21.7	68,820
11	캐나다	13	75,864	201.0	5,679	15.0	47,590
12	포르투갈	9	28,810	282.5	1,203	11.8	32,680
13	독일	12	176,244	210.4	8,027	9.6	54,560
14	덴마크	15	10,858	187.5	543	9.4	56,410
15	오스트리아	16	16,242	180.3	629	7.0	55,300
16	핀란드	18	6,347	114.6	298	5.4	48,580
17	노르웨이	17	8,237	151.9	232	4.3	68,310
18	이스라엘	14	16,608	191.9	271	3.1	39,940
19	체코	19	8,457	79.0	297	2.8	37,530
20	일본	21	17,022	13.5	761	0.6	44,380
21	한국	20	11,050	21.6	262	0.5	40,090

주 : 인구 490만명 이상, 1인당 GNI 3만2천달러 이상

유럽 국가들의 피해가 이렇게 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안일한 초기 대응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 감염병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임은 익히 알려져 있다. ‘집단면역을 실험해야 한다’는 의견에 최대한 동의하여 결국 신종 바이러스를 단기간에 퇴치할 수 없으므로 전 지구인이 견디면서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방역’이 지니는 궁극적 가치는 절대 간과될 수 없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급속한 전파력을 지닌 바이러스 감염은 기하급수적인 지수함수 추세로 전파될 속성을 지니지만, 이 곡선의 기울기를 얼마나 낮추며 버텨내느냐에 따라 개별 지역민의 실질적 피해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김범준의 옆집물리학). ‘방역’이란 이를 위한 치열한 전투이며 수많은 희생과 봉사가 뒤따라야만 승산이 높아진다. 10번째 사망자 이후 일정 단계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 아래 그래프를 보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방역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러한 결과를 얻기 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바이러스와 정면대결을 해왔는지를 느낄 수 있다.

그림 1. 코로나19 확산 추세(10번째 사망자 이후 경과일)



자료: 웹사이트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

II. 코로나19 방역과 문화적 이해

그런데 그동안 우리보다 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여긴 ‘선진국’들이 왜 이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일까? 의료체계의 붕괴, 고령화 비율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와 함께 문화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코로나 확산 최상위권에 위치한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친밀한 대면접촉의 습관과 낙천적 성향 등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스웨덴,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가의 의료체계를 신뢰하고 개인의 안전을 개인이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닌 탓에 아무리 방역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권유를 따르는 것을 상대적으로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우수한 의료시스템과 생활 속 거리두기의 습관이 본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 당시 확진자 통제에 소극적이었고, 심지어 의료인의 희생에 대해서도 더 부정적이다. 물론 이들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성공적 방역 결과를 인정한다. 하지만 문화의 차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거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안들도 있는데 마스크와 프라이버시권은 이러한 대표적인 사안이다.

1. 마스크 착용의 호감도

마스크 착용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 할 수는 없으며, 그보다는 손 씻기나 환기에 더 신경 쓰라는 WHO의 공식적 권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의 피해도

에서 우리나라와 북미·유럽 간의 차이를 가름한 결정적 이유는 ‘마스크 착용’때문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서양인들은 마스크 착용을 꺼리는 것일까? 많은 이들이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든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얼굴의 일부가 가려지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거부감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많은 추가적 논거들이 동원될 수 있다. 9·11 테러 이후 확산된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가 마스크 착용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 부분도 있고¹⁾,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근본적 습관 차이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²⁾.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한국인들이라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지 않은가? 사실 한국에서 마스크의 중요성은 감염병에 대한 무능한 정부대응의 교과서로 불리던 2015년 메르스(MERS) 사태를 겪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여기에 그동안 끊임없이 미세먼지의 불편함을 견디면서 형성된 최소한의 개인방역시스템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편함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감각을 익혔다고 보인다. 공중도덕이나 무질서와 관련해 특하면 선진국들에 비해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이라 반성해왔던 우리지만 마스크 착용은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예의로 인식하는 부분도 매우 크다. 이러한 맥락을 간과한 채 마스크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과 마스크에 익숙한(충분히 참을 수 있는)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 시선은 어쩌면 여전히 존재하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³⁾의 발로가 아닐까?

2.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순응

이번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보장할 것인가?”도 민감하게 논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한국의 방역 체계가 뜨거운 관심사이다⁴⁾. 코로나

1) 이와 반대로 1995년 일본 사이버종교집단 음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 이후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가 마스크 착용 습관을 확산한 경우도 있다.

2) 정재승은 ‘헬로키티’ 캐릭터나 이모티콘 형태를 예로 들면서 아시아권과 서양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르다고 말한다. 동아시아가 눈의 모양과 움직임을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익숙한 반면, 서양은 입모양의 움직임을 중시하기 때문에 입이 보이지 않는 경우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이다(정재승·진중권, 2009). 니스벳(2004)나 고프닉 외(2008) 등의 실험 결과에서 뒷받침하는 이러한 진화심리학적 견해는 환원주의적 위험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문화권 간 관점의 차이를 일정 부분 설명해준다.

3) 사이드(E. Said)에 의해 부각된 개념으로, 동양 문화에 대해 특정하고 편향된 형태로 바라보고 재현하는 서양의 태도를 가리킨다.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바르트가 일본의 문화를 체험하며 가부키에 대해 기호학적으로 분석한 장면이 연상되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숨겨져 있고 신비한 매력으로 묘사된다.

4)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단체에서는 확진자의 성별, 연령대, 입국일, 확진일, 입원 기관, 이동 경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 위험기간 경과 후 이동 경로는 삭제한다. 이를 해외 언론에서는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방역 체계에 대해 연일 찬사를 보내는 BBC에서도 확진자 정보 공개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확진자의 이름과 직장, 세부주소까지

19 발생 초기부터 우리 정부에서는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하여 동시간 대 같은 장소에 있던 일반인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수많은 자발적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제공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상세한 정보제공에 대해 우리나라와 유럽의 시각은 엇갈린다.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관련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49.2%)과 현재로 적절하다는 의견(40.6%)이 압도적이며⁵⁾, 안심밴드 착용에 대해서까지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이다. 반면 유럽의 일부 언론들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정부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사생활 침해를 문제 삼지 않고 체제에 순응하여 타인을 밀고하는 한국인의 태도는 개인의 자유를 포기한 것이라는 비난도 등장했다⁶⁾.

그림 2. 대학생이 개발한 코로나 감염 확진자 실시간 정보 화면



자료: 웹사이트 “코로나맵”

공개한다는 오보를 내기도 하였다.

5) <뉴스1> 2월 7일자 여론조사

6)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4월 6일자의 프라델(pradel)의 칼럼, 프랑스 과학자문위원회 감염병학자 말비의 인터뷰 등이 대표적 발언인데, 이후 프랑스 내에서도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 정보의 상세한 제공을 한국 사회의 고유한 성향과 결부시키는 견해는 자신들만의 가치가 우월하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더욱이 정보의 상세한 제공이라는 흐름이 한국 내에서만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사생활 보장과 개인의 자유를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왜 도시 간 이동을 봉쇄하고 개인의 이동 조차 제한하는가? 확진자의 동선이 일시적으로 공개되고 마스크 착용을 습관화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개인들이 원만하게 왕래할 수 있는 것과, 개인의 사생활 비공개로 외출금지 ‘락다운(Lockdown)’을 걸어야 하는 상황 중 무엇이 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인가?

유럽에서도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질병 추적 프로그램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와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⁷⁾. 특히 민간 기업인 애플과 구글이 공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추적 시스템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데 코로나19 위기가 악용되고 있다는 경고까지 이어진다(〈IT뉴스〉 2020년 4월 17일). 국내에서도 현재의 정보 제공 조치가 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제정된 법률에 따라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예외를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하지만 해당되는 개인의 권의 보장은 미흡하다(이진규, 2020). 감염자는 거리낌 없이 발병 사실을 밝히고 충분한 치료와 경제적 피해가 보상되어야 하는데 지나친 공개로 감염자로 낙인찍히는 것이 더 무서운 상황이다. 강제 안심밴드 도입은 인권침해의 소지도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장재연, 2020).

B,C와 A,D라는 기존의 서력기원은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바뀌어야 한다는 풍자에서 보듯 2020년은 지난 수 백 년 간 쌓여 왔던 사회적 가치들을 다시 성찰해야 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은 코로나19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사회적 신뢰감이 높아지는 의외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⁸⁾. 이는 단순히 재난을 맞이한 결속감의 형성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정부 체계가 개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지 않고 정책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기본적 믿음에 바탕한다고 보면 너무 낙관적인 주장일까? 개인의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사 협조까지 고려해야 하는 현재 한국의 태도는 정부와 국민 간 일종의 타협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과거 계몽주의 시대의 사회계약론이 떠오른다. 인간주권의

7) 유럽 내 8개국에서 130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 ‘PEPP-PT(Pan-European Privacy-Preserving Proximity Tracing)’는 DP-3T(Decentralized Privacy-Preserving Proximity Tracing)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양한 접촉추적 프로젝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PEPP-PT는 질병을 추적·관리하면서 개인정보까지 동시에 보호하는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Coindesk Korea〉 2020년 4월15일).

8) 2020년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신뢰할 만하다고 느꼈나?”는 질문에 61%가 신뢰할만하다고 응답하였다(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절대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라는 불가피한 조직을 인정해야 했지만, 자유와 평등, 공동의 이익이 언제나 고정된 형태일 수는 없다. 동아시아 사회가 친밀성의 공동체에 기반한 전근대적 가치를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다는 획일적 시각은 각기 다른 다양성을 고찰하면서 앞으로 더 치열하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명칭과 프레임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친숙한 ‘프레임이론(Frame theory)’⁹⁾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사태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다양한 명칭이 혼재되면서 고정된 상(像)들이 달라붙는 프레임(Framing)의 각축전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WHO가 공식으로 정한 ‘COVID-19’는 ‘Coronavirus disease 2019’의 약어로, ‘2019년에 발병이 보고되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이라는 뜻의 가치판단이 배제된 의학적 용어이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증폭하자 이에 해당하는 ‘팬데믹’이 부가되어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공식 용어로 굳어진 것은 ‘코로나19’이다. 이는 마치 우리 주위를 떠도는 유령과도 같은 의인화된 표현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충격과 이로 인한 변화가 일찍부터 감지되었음을 내포한다.

흔히 그러하듯 호명(呼名)은 정치적 논쟁을 야기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국제 바이러스 분류 체계 위원회에서는 ‘SARS-CoV-2’로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중국에서 발병하였던 사스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중국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중국으로 떠넘기는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발병 초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고, 트럼프 미국 정부와 일본·한국의 극우 세력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우한 바이러스’는 사태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 전가하는 비겁한 공세이다¹⁰⁾. ‘폐렴’과 ‘우한바이러스’도 우리에게 주는 부가적 의미는 미묘한 차이를 지닌다. ‘폐렴’이 하나의 질환으로서 치료해야 할 과제로 다가온다면, ‘바이러스’는 인간이라는 종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으로서, 여기에 우한이 결합되어 ‘중국 = 인류에 해악을 끼치는 가증스러운 집단’이라는 고정된 상(像)을 형성하도록 하려 한다¹¹⁾.

9) 고프먼(E. Goffman)과 레이코프(G. Lakoff)에 의해 각인된 이론으로, 프레임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며, 인간의 아이디어나 개념을 구조화하고 사유방식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정치집단이나 미디어에서는 현상이나 주요 이슈를 특정한 은유나 단어 등으로 재현해 전달하고, 수용자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들일면서 머릿속에 고정된 상(像)을 형성하고 고정된 태도를 취하는 프레임이 이뤄진다고 한다.

10) WHO에서는 이러한 ‘낙인효과’를 우려하여 병명에 지역 이름을 붙이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1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심지어 ‘중국 바이러스’라고 반복해 부름으로써 자신의 무능과 오만을 중국에게 전가하려

III.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

프레이밍은 부정적 씩우기뿐만 아니라 대안의 선택과도 연결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파급 효과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에 관한 학술적·정책적 진단들도 바라보는 시선의 지점에 따라 각기 다른 길을 향할 수밖에 없다. 우선 “코로나19=대규모의 재난”이라는 관점이 대두된다. ‘코로나19’는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인간이 한없이 무력할 수밖에 없는 초월적 사건이며 ‘블랙스완(Black Swan)¹²⁾’을 초래하는 경제적 대재앙까지 포함된다. 이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을 합쳐 호혜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재난방지 시스템을 정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사회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사건”이라는 관점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은 결국 끝없이 확장되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탐욕이며, 이번 사태는 어쩌면 맹목적으로 달려온 사회체계를 수정하고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 “코로나19=우리 곁에 늘 떠도는 불안의 조각들”이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프레임은 결국 일상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촉구하며, “문화적 관점에서 감염병과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익숙해져야 하는가?”의 숙제를 낳는다. 코로나 19로 인한 문화 부문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를 세 프레임으로 거칠게 언급해본다.

1. 재난프레임 : 문화예술 분야의 위기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문화예술 산업 부문은 그 피해를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영화 「기생충」의 쾌거로 한껏 고무되었던 영화산업은 직격탄을 맞았고, 대부분의 전시와 공연이 취소된 탓에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출이 급락하였다.

에쓰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미국 언론에서는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라는 뜻의 ‘CCP 바이러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12) 레바논 출신의 미국 투자전문가 탈레브(N. Taleb)가 사용한 용어로 기존의 경험을 깨는 예기치 못한 극단적 상황이 나타나 경제와 사회 등에 큰 파장을 불러오는 사건을 일컬으며, 2007년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표 2. 2020년 영화 관객수 및 매출액

월	한국영화					외국영화 포함				
	개봉 편수	상영 편수	매출액	관객수	점유율	개봉 편수	상영 편수	매출액	관객수	
1월	59	138	99,273,272,998	11,588,401	68.8%	165	401	143,681,067,930	16,843,696	
2월	58	135	41,725,992,280	4,942,369	67.0%	149	357	62,301,337,980	7,372,110	
3월	51	86	2,523,361,200	307,591	16.8%	155	341	15,150,090,450	1,834,450	
4월	71	127	1,120,062,760	146,076	15.0%	180	423	7,515,822,520	972,592	
5월	5	44	724,303,100	88,039	21.1%	36	178	3,353,774,040	416,451	
계	244	530	145,366,992,338	17,072,476	62.2%	685	1,700	232,002,092,920	27,439,299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http://www.kobis.or.kr>)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상반기 예술 창작자를 비롯한 문화예술분야는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예술의 특성상 사회복지 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축제나 이벤트도 대부분 취소되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도 중단된 상황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생존권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붕괴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영화산업의 피해와 달리 넷플릭스를 비롯한 온라인 문화콘텐츠 시장은 반대로 활황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화소비 방식의 특성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¹³⁾.

그림 3. 미술전시 티켓 판매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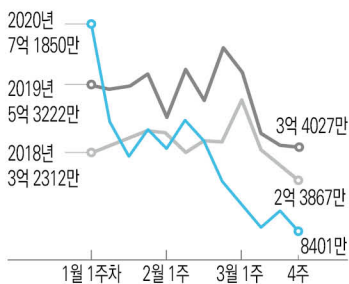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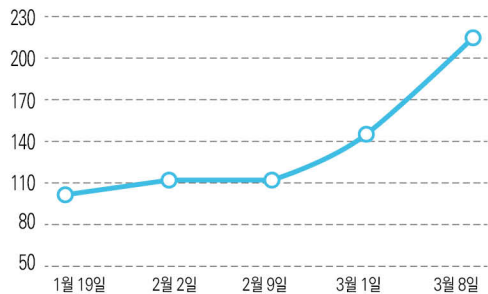


그림 4. 넷플릭스 이용량 변화(2020년, 단위:%)



13) 넷플릭스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의 인기는 기존의 문화생산과 유통체계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렇게 온라인 공간이 문화예술 유통의 중심이 될 수록 문화독점 현상은 가속화되고 가뜰이나 열악한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은 더욱 더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아래 표와 같은 긴급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지원정책은 예술인 직접 지원, 뉴딜형 지원사업, 유동성 지원, 공모형 지원사업, 기존 보조금 사업의 운영 유연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전문화재단에서도 지역예술인 기초 창작활동비 지원을 긴급하게 시행하여 기초창작활동계획서 근거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표 3. 코로나19 관련 중앙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 현황

예술인복지재단	코로나19 피해 공연업계 긴급생활자금 용자 : 예술활동증명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행사, 공연 취소로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 총 30억 규모, 금리 1.0% 인하(2.2%→1.2%), 지원한도 증액(5백만원→1천만원), 상환기간 유예(1년거치3년상환→2년거치3년상환)
	예술활동증명 시 코로나19 기간 취소된 공연도 실적 인정
	창작준비금 코로나19로 피해 예술인 가점부여, 우선지원 : 확진·격리 등으로 활동불가, 공연·계약 축소, 취소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예술경영지원센터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정부 지원 대책 안내 : 예술경영지원센터 설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유예 :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체납 가산금 면제(~20. 12. 31.)
	피해기업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피해기업 우대보증, 경영안정자금 등 관련 사업 확대 적용
	방역지원 : 확진자 방문 등 피해 영화관 대상 전문 방역비용 지원, 영세 상영관 방역용품 지원(200개 극장 5,000개 지원)
문화예술위원회	코로나19 관련 문예기금 보조사업 운영대책 마련 : 코로나19에 따른 일정변경 등 허용, 사업 변경, 취소에 따른 정산지침 마련, 사업 포기에 따른 불이익 미적용
	예술나무로 다시 봄(코로나19 모금 캠페인)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코로나19극복,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공모 : 온라인 교육 콘텐츠 기획 공모, 총 200건 선정, 10건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2억)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연수 아르떼 아카데미 확대
국립국악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ON'프로젝트 : 전통공연예술가(개인) 공연영상 및 프로필 제작, 공연 영상 공개, 출연사례비 100만원~160만원 차등지급, 10분내외 1작품, 총 31명
문화체육관광부	민간 소규모 공연장(300석 미만) 방역물품 지원 : 손세정제(860개), 시설 소독약제(4,430개), 소독약제 분무기(860개)
	관광업계 긴급 금융지원 : 신용보증부 특별융자(1,000억),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의 1년간 상환 유예(2,000억)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성금 기탁 : 문체부 직원 성금 3천만원 예술인복지재단 기탁
	코로나19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예정)
	소극장 공연기획 및 제작비 지원(예정)
	예술인 및 예술단체 공연 제작비 지원(예정)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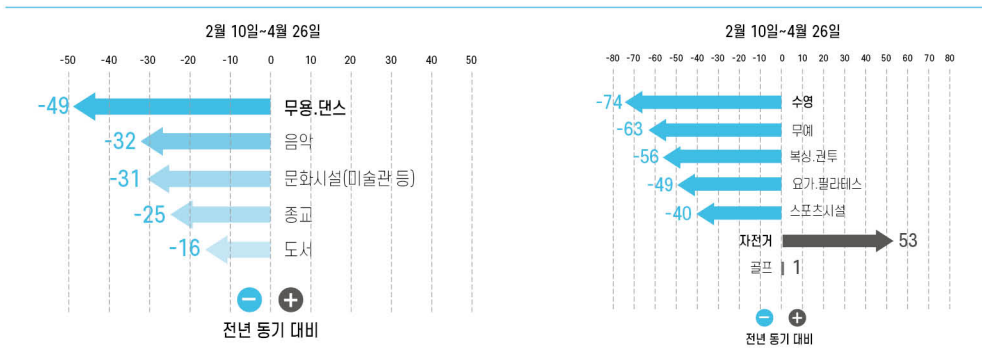
자료 : 하정호(2020)

2. '새로운 여가' 프레임 : 문화 소비 방식의 변화

문화예술인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하지만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바로 '문화의 침체'를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문화는 워낙에 규정하기 어렵기도 하고, 수많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2020년 스포츠 세부업종별 매출을 보면 모든 종목이 하락세인 반면 자전거는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문화예술 세부업종별 매출에서는 도서의 매출폭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낮았다. 대인 접촉을 기피하게 되다보니, 어쩌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조용한 기회가 높아지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림 5. 문화예술(좌)와 스포츠(우) 세부업종별 매출



자료: <KBS NEWS>

'조용히 쉬는' 것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이 꼭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단체로 장대한 경관들을 보며 감탄하는 것도 물론 커다란 즐거움이겠지만, 우리 주위의 사소한 것들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도 또 다른 의미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자각은 이미 개별적, 일상 체험적 여행으로 이동하고 있는 관광의 흐름에서 감지되고 있다. 드 세르토(M. de Certeau)에 따르면 인간이 사회구조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성이나 자유의지에 의한 제도적 차원보다 아주 일상적인 생활 차원에서의 창조성이 좌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화, 독서, 요리, 쇼핑 등 보다 더 일상적이고 주변적인 주제들이 수행성(performance)과 구조를 지니는 중요한 문화실천이라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확산될 수밖에 없는 비대면의 일상화는 개인을 돌아보고 치유하는 성찰적 시간이 수반되며, 여기에는 문화적 감성이 일상을 풍요롭게 채우는 우군으로 소급될 수 있다.

3. 사회전환 프레임 : 문화예술생태계의 근본적 변화

문화 부문의 단기적 정책과제로는 벼랑 끝에 서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안전망 구축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소비 방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문화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문화 생산과 소비의 전제로서 우선 미학적 차원에서 ‘가상’의 경험이라는 난관을 풀어야 한다. 미술관과 박물관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 해설과 실물 투사 기술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원본을 접하고 싶은 욕망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이에 따른 원본과 시뮬라크르(simulacres)¹⁴⁾의 차이를 얼마나,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가령 사이버 상으로 제공되는 미술전시, 온라인 공간을 통해 유통되는 공연 등이 증가하면 어떻게 관람료와 저작권을 새로이 산정하고 이익을 배분할 것인가 등이 당면 과제로 대두될 수 있다.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현재의 문화생산과 소비, 유통, 후원 체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세계 문화사에서 대규모 전염병이나 재난은 종종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과를 초래했다. 귀족이 생산경제를 지배하던 중세 장원 경제 체계에서 예술의 생산은 초상화와 같이 절대적 후원자인 귀족의 입맛에 맞는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하지만 페스트의 창궐은 농촌경제의 파탄과 도시이동을 촉진하면서 귀족 사회를 몰락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이후 도시 부르주아 계층이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그 결과 문화 소비와 후원의 체계가 송두리째 바뀌고 대중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예술 사조들이 분출되었으며, 미술관과 공연장, 출판물의 타겟이 대중으로 이동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과 가상성의 확산은 현재의 대중 중심 문화예술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문화예술 생산물의 내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문화매개체로서 미디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미디어를 통한 대리체험의 형식에 따라 콘텐츠의 특성도 변화될 것이다¹⁵⁾. 이러한 흐름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역 문화계에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당장은 경제적 대응이 절실하더라도 일상의 커다란 변화에 따른 문화적 역할과 지역 문화의 위기를 정책적 담론의 주요한 아젠다로 부각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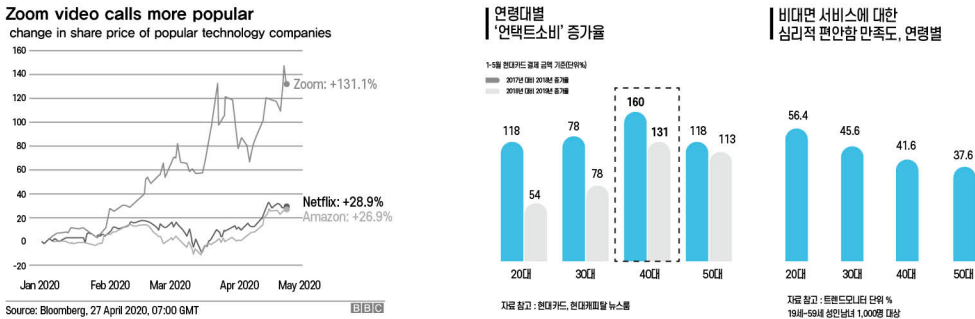
14) 보드리야르(J. Baudrillard)가 사용한 개념으로 현대사회에 만연하게 된, 원본과 차이가 없는 모사물(模寫物)을 가리킨다. 보드리야르는 디즈니랜드와 미키 마우스 등을 예로 들면서 문화 수용자의 가상적 경험을 강조한다 (Baudrillard, 1981).

15) 일례로 여행정보프로그램은 이제 직접 가보기 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부터 대리체험의 방식이 더 확산될 것이다. 예능인들이 출연하여 유명한 명소를 찾고 신기한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내용도 계속되겠지만, KBS에서 방영되고 있는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와 같은 일상적 산책 같은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져 로컬리티가 부각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IV.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의 역할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비대면 접촉은 우리에게 계속 강요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앞당겨질 것이라면, 문화적으로는 대면 공동체의 비대면 접촉과 가상적 문화 체험이 지금보다 훨씬 일반적으로 확산될 것은 자명하다. 화상 회의 플랫폼의 매출은 급증하는 추세이고,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우호적이다.

그림 6. 화상회의 툴 ‘Zoom’의 성장(좌), 증가하는 언택트(우)



자료: BBC, 삼성전기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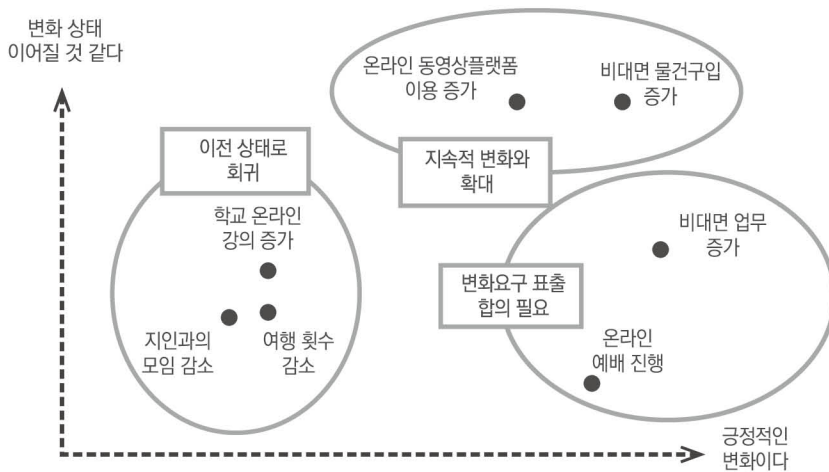
그러나 이렇게 변화된 환경을 개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2020년 4월의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남녀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함과 불안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한다¹⁶⁾. 여기에는 고립과 외출 자제로 인한 답답함, 소통단절에서 오는 무기력감, 사회적 관계 결여에서 오는 우울감 등이 주요한 계기로 밝혀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면 비대면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를 묻는 아래 그림을 보면 응답자들은 쇼핑과 온라인동영상콘텐츠 이용은 높아질 것이지만, 커뮤니티와 여행 등은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 여겼다¹⁷⁾. 온라인을 활용한 학교 교육도 어느 정도 높아질 것이지만 긍정적 변화라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비대면 접촉이 확산되고 이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대면적 소통의 갈망은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16) 인크루트, 알바툴에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3,903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

17) 한국리서치에서 2020년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1,000명 조사

그림 7.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전망 인식



질문 : (변화평가, 가로축)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각의 일상생활 변화가 우리사회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화 전망, 세로축) 코로나 19상황이 끝나면, 아래 각각의 변화 양상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변화된 상태로 유지될 것 같습니까?

자료: 한국리서치 “어른속의 여론”

위의 그림에서는 많은 부분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도 많지만, 끝을 향해 치닫는 세계화의 결과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면 불행히도 유사한 팬데믹은 언제든지 출몰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이 2020년 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기다리다 보면 팬데믹의 종식이 올 것이라는 믿음도 크게 작용했겠지만, 불쑥불쑥 변종의 감염병이 들고나는 과정 속에서 점차 지쳐갈 것이다. 역겨움으로부터 분노와 배척의 문화적 코드로 혐오가 잉태되었다는 진화심리학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감염병에 대한 거부감도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와 배제, 희생양 찾기와 처벌로 발현되는 부정적 고리가 반복될 수 있다(박한선, 2020).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적 범죄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듯 문화를 통해 혐오의 감정을 치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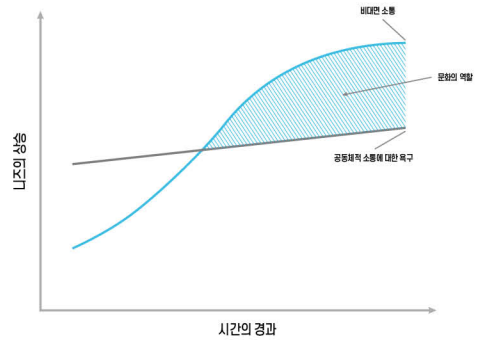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언택트’, ‘퍼스널 스페이스’ 등 난무하는 신조어들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방책을 조급히 찾게 된다. 대부분의 대안은 비대면 소통의 곡선을 따라가면서 이에 적응하고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집중한다. 문화산업의 영역도 당연히 이러한 대응책을 찾아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비대면 환경이 증가

되는 과정에서 대면 접촉 기회에 대한 갈망도 여전한 데서 오는 괴리, 이 간극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도 고민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비대면 사회에서 문화플랫폼과 문화콘텐츠의 중요성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직접 대면 욕망을 충족하는 문화 생산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도 계속 중요하다.

그림 8. 언택트(Untact)시대 온택트(Ontact) 요구



그림 9. 비대면 사회에서 문화의 역할



자료: <2020 이노션 트렌드>

참고문헌

- 박한선(2020), “코로나19와 질병X의 시대: 전염병은 왜 혐오를 일으키는가”, 〈SKEPTIC〉 Vol.21,
- 이진규(2020), “코로나 바이러스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고 -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은 항상 옳은가?”, 〈2020 KISA REPORT〉 vol. 2, 한국인터넷진흥원.
- 장재연(2020), “코로나 방역에서 놓친 소중함 인권 연대 경제”, 〈산동아〉 2020년 5월호.
- 하장호(2020), “코로나19, 문화예술 긴급지원정책 평가와 제안”, 〈코로나19, 문화예술 긴급지원정책을 평가하고 제안하다〉 발표문.
- Baudrillard, J.(1981), *Simulacres et Simulation*, 하태환 譯(1992), 『시뮬라시옹』, 민음사
- de Certeau, M.(1984),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정준영 · 김용호 譯(1996), 『문화, 일상, 대중』, 한나래.
- Gopnik, A.(2000), *The Scientist in the Crib: What Early Learning Tells Us about the Mind*. . 광금주 譯(2008), 『아이들은 어떻게 배울까?』, 동녘사이언스.
- Nisbett, R.(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최인철 譯(2004), 『생각의 지도』, 김영사.
- “김범준의 옆집물리학: 증가”, 〈경향신문〉, 2020.3.25.
- “빅데이터로 본 문화예술 · 스포츠 · 여행업 - 평균의 함정 주의해야”, 〈KBS NEWS〉, 2020.4.3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6441>
- “애플 · 구글 공동 코로나19 추적 앱 사생활 침해 우려 - 영구 감시체계 가능”, 〈IT 뉴스〉 2020.4.17, <http://www.itnews.or.kr/?p=32793>
- “언택트(Untact)를 넘어 온택트(Ontact) 시대로”, 〈이노션 월드와이드 바이러스 트렌드〉
- “확진자 스친 블루투스 기기에 ‘알림’ - 유럽, 개인정보 침해 없는 추적 · 관리 고민”, 〈Coindesk Korea〉 2020.4.15,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29>
- “Coronavirus: A visual guide to the economic impact”, 〈BBC NEWS〉, 2020.4.30, <https://www.bbc.com/news/business-51706225>
- 삼성전기 블로그, <http://blog.naver.com/sem2017/221614943759>
- 영화진흥위원회, KOPIS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2020년 월별 매출액 통계자료, http://www.kopis.or.kr/por/stats/perfo/perfoStats.do?menuId=MNU_00028&searchWord=&searchType=total#n
-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 <https://coronaboard.kr>
- 코로나맵, <http://coronamap.site>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 코로나 인식조사, <https://hrcopinion.co.kr/archives/series/covid-19>

대전세종포럼

대전세종포럼 통권 제73호



편집위원

위원장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위 원 **박근수** (배재대학교 여가서비스경영학과 교수)

설성수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온정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범규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문충만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윤희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대전세종포럼

대전세종포럼 통권 제73호

발행일 2020년 6월 3일

발행인 박재욱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등록번호 대전중. 바00002

주소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08

제작 (주)유선애드플랜 (Tel.042-632-3007)

연구과제 제안 안내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시·세종시 각계각층의 연구요구를 수용하고
활발한 지적교류와 정책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연구과제로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대전세종연구원 홈페이지(www.dsi.re.kr) 시민의소리(연구제안)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DAEJEON
SEJONG
FORUM

www.dsi.re.kr